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징계(훈계)요구

제 목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에서 5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평정(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2회 실시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서 “평정시기를 달리 지정할 경우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은 2016년 상반기까지 5급 이하 공무원의 정기평정 기준일을 6월 30일, 12월 31일로 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왔다.

2. 지적사항 및 위반내용

함양군에서는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시기 변경 시행계획」 공문(★★과-****, 2016.7.25.)으로 5급 이하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현행 6월 30일과 12월 31일에서, 4월 30일과 10월 30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공문에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평정기준일 변경(4월 30일, 10월 30일) 시 세부적인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 적용방법까지 아래와 같이 명시하여 결재를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p>< 시행 1년차 ></p> <p>- 상반기: <u>해당년도 1. 1. ~ 4. 30.(4개월)</u></p> <p>- 하반기: <u>해당년도 5. 1. ~ 10. 30.(6개월)</u></p>	<p>< 시행 2년차 ></p> <p>- 상반기: 전년도 11. 1. ~ 해당년도 4. 30.(6개월)</p> <p>- 하반기: 해당년도 5. 1. ~ 해당년도 10. 30.(6개월)</p>
--	--

함양군에서는 변경된 평정기준일을 1년 이후인 2017년 이후부터 적용하지 않고, 2016년 하반기 정기평정 시 즉시 적용하였으며,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과 달리 임의로 2016.7.1. ~ 2016.10.30.(4개월)로 정하여 규정을 위반한 승진후보자 명부(2016.11.30.자)를 작성하였다.

(※ 지침준수 시 평정기간 : 2016. 7. 1. ~ 2016. 12. 31.)

이후,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2017.1.1.자)를 위한 군 인사위원회(2016.12.28.)에 규정대로 작성된 기존의 승진후보자 명부(2016.7.31.자)가 아닌,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위반하여 새롭게 작성한 2016.11.30.자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였다. 군 인사위원회에서는 “각 직급·직렬별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자 순으로 결원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 결정하였다.

(※ 함양군에서는 2016년 1월 군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대로 승진대상자로 의결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모든 직급·직렬의 승진대상자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대로 의결함)

위와 같이,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위한 군인사위원회 개최 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위반한 승진후보자 명부를 제출하여 2017년 1월 1일자 정기인사 시 4급, 행정6급, 행정7급 각 1명씩 총 3명의 승진자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처 분 요 구

- ① 함양군수는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처리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5급 이하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실무담당자 지방행정주사 ○○○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39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과 실무책임자 지방행정주사 ○○○, ★★과 감독책임자 지방서기관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절차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 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I-2에서 시험위원의 구성방법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지적사항 및 위반내용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XI-2에서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최소 5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전문가(교수, 다른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로 임명·위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교원의 경우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능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한,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2조에서도 경력경쟁 임기제 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위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에서는 2015년 경력직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박물관 학예연구사, *기존연구사 2010.9.1.~2015.8.31, 계약기간종료) 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위원 중 외부위원 4명을 ◎◎조합 이사장, ◇◇◇ 자문위원, ◆◆◆◆ 회장, 前공무원으로 구성하여 해당 직무분야 전문가 및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1명도 없는 시험위원을 구성하였다.

또한, 내부응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위원 1명을 □□□□□소장(○○○, 現 퇴직자)으로 응시자 중 1명의 직장상사로 구성하여 「함양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등 부적정한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① 함양군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또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현 ●●면) 실무책임자 지방농업사무관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금회에 한하여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훈계요구

제 목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가축방역 교육 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 ×××과는 2012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예방접종·방역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 등록필증을 교부하고, 그 소유자 및 운전자가 가축방역 교육 이수여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에 따르면 가축·사료 등을 운반하거나 예방접종·방역 등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여야 하고,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르면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시설출입차량 등록 3개월 전부터 등록 후 3개월까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매 4년이 되는 시점부터 3개월 내에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의3 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별표 3]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

준은 ‘1회 위반: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50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 ×××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및 제60조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가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과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12명이 차량 등록일로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년 ~ 6년 이상 경과하도록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군수는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12명)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 @@@, ###,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 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위생교육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즉석 판매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포장처리업
계	137	103	10	10	1	3	10
교육이수	104	79	8	9	0	0	8
교육미이수	33	24	2	1	1	3	2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 판매업 및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에게 과태료(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위반 60만 원)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 등은 축산물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수자에게 200천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 ×××과는 □□□ 등 33명이 감사일 현재까지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미이수자에 대한 추가 교육안내 및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군수는 축산물판매업 등 위생교육 미이수자(33명)에 대하여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②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운전자 가축방역 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 @@@, ###,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 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차고지 확인서 발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 ≠≠≠과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확인서 발급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차고지를 설치하고 차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신청을 하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차고지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화물자동차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 ≠≠≠과는 AAA 등 업체가 공동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 ☆☆면 §§리 000(지목 : 공장용지 , 차고지면적 : 11,350㎡)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면적인 11,350㎡를 1,435㎡ 초과하여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을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군수는 화물자동차 사고지 확인서 발급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과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앞으로 담당공무원 교육과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

조 치 기 관 ○○○

내 용

1. 노인복지시설 운영총당 적립금 관리 부적정

나. 시설운영총당적립금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 천 원)

시설명 (시설장)	시설운영총당적립금 사용			비고
	사용일자	사용액	사용처	
계		17,186		
AAA (BBB)	2016.6.10.	671	방충망설치	
	2016.12.25.	2	법인세, 지방세	
	2017.3.14.	781	컬러프린터토너외	
	2017.3.21.	950	공동모금회 차량보험료	
	2017.3.24.	960	공동모금회 차량블랙박스외	
		1,994	공동모금회 차량구입	
		4,000	인건비총당	
	2017.5.4.	3,000	인건비총당	
	2017.5.10.	726	붕고III보험료	
	2017.6.25.	1	법인세, 지방세	
	2017.7.5.	100	공동모금회 차량인도금	
	2017.9.27.	1,500	차량유류대	
	2017.11.17.	821	차량유류대	
	2017.11.27.	1,680	기저귀구입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그 밖의 특수한 사업을 위하여 2회계연도에 이상에 걸쳐서 그 재원을 적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예산에 계상하여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그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운영충당적립금은 사전에 적립되지 않을 경우 기관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설비 관련장비, 파손 및 내구연한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사무기기 등)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적립된 예산은 반드시 적립목적에 맞게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과는 노인복지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 ◇◇면 △△△리 000 소재 사회복지시설 AAA(시설장 BBB)에서는 시설운영충당금을 적립목적에 맞게 시설운영에 상당한 필요가 있는 사항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6. 6. 10. 방충망설치 671천 원 등 17,186천 원을 시설운영충당금에서 지출하였다.

그런데도 ○○군은 위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운영충당금을 적립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노인복지시설 법인전출금 사용 부적정

가. 전출금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 천 원)

시설명 (시설장)	전출금 사용			비고
	사용일자	사용액	사용처	
계		37,070		
CCC(DDD)	2015.2.16.	23,000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비	
	2015.4.11.	880	법인보고서 세무확인수수료	
	2015.5.5.	5,000	법인기본재산증명수수료	
	2015.5.13.	4,000	식당바닥누수공사(선금)	
	2015.5.18.	1,000	식당바닥누수공사(중도금)	
	2015.5.30.	3,190	식당바닥누수공사(잔금)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이 시설 전체 세입에서 제반운영비 등을 지출(반드시 운영충당적립금 및 시설환경개선준비금까지 적립하여야 함)하고 남은 잔액인 잉여금에 대하여 법인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며,

동 잉여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으로 전출하여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법인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중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에 한하여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과는 노인복지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러나 ○○군 ▲▲면 ▼▼리 000 소재 사회복지시설 CCC(시설장 DDD)에서는 법인회계로의 전출은 시설환경 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포함한 제반 운영비를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만 가능한데도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채 2015.2.16.부터 2015.5.30.까지 37,000천 원을 시설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법인이 기능보강사업 설계용역비 등으로 부당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군에서는 위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운영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전출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노인복지시설 차입금 관리 부적정

가. 부당차입 현황

○○군 ○○읍 ◎◎리 000 EEE에서는 대표자 FFF로부터 2017. 3. 28.부터 2017. 7. 10.까지 50,000천 원을 부당하게 차입하였다.

나.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0조 및 제54조에 따르면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조, 제6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회계는 법인회계, 시설회계,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시설회계의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에 따르면 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일시 운영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으로부터도 차입이 가능하지만 시설의 대표자와 시설장으로부터는 차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과는 노인복지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라 시설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의 세출예산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에서는 위 사회복지시설이 부당하게 대표자로부터 차입하였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군수는 부당하게 전출한 법인 전출금 37,000천 원은 시설회계계좌로 반납 조치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및 시설관계자 회계교육을 등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②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거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관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과)

조 치 기 관 ○○○

내 용

1. 업무개요

○○○ ≥≥≥과는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다.

<표1>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현황

구분	2015. 7.이후	2016년	2017년	2018.3.까지	비고
제작회수	6회	5회	7회	2회	
제작업체	□□□ 2 ㄴㄴㄴ 4	□□□ 3 ㄴㄴㄴ 2	□□□ 3 ㄴㄴㄴ 4	ㄴㄴㄴ 2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15. 8. 5.)」에 따르면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금지를 위해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제작일지에는 제작 시·종료시간, 일일 생산량, 봉투 불량 발생량, 점검자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조업체의 고유 번호 등을 표시하며, 문장의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업체는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군 ≥≥≥과에서는 제작업체에 현지 출장하여 입회·확인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봉투를 검수하기 전에는 제작일지를 확인하여 쓰레기종량제 봉투 불법제작·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총20회(2015년 6회, 2016년 5회, 2017년 7회, 2018년 2회)에 걸쳐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하면서 담당공무원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점검(입회·확인)한 사실이 없고, 봉투제작 후 검수를 완료하기 전에 제작일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군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업무를 소홀히 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불법으로 제작·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제작과정에 반드시 입회하시고, 제작업체에서 작성한 작업일지 등을 확인 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제작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징계(훈계)요구

제 목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함양군은 2002. 1. 8.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를 제정하여 (사)함양군장학회(이사장 : 함양군수)를 설립하였고, 2005. 4. 13.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함양군의 인재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고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기 위해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였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로 1.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2. 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 관할구역 내의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3.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4. 장학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업,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사)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8조에서 장학회가 시행하는 장학사업으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위탁사업 외에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 후원금의 지원과 관내 각급 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에 대한 사기양양 등 학교 교육여

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함양군은 일반회계 기금전출금으로 매년 10억 ~ 15억 원 정도 편성하여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한 후, 인재육성기금에서 (사)함양군장학회로 보조금으로 교부한 다음, (사)함양군장학회에서 장학금 일부(1억원 이하)는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자금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최종 교부하였다.

※ 자금 흐름 : 일반회계 → 인재육성기금 → (사)함양군장학회 → 〰〰〰교육지원청(초등학교) 및 각급 학교(중 고등학교)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사황

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함양군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고, 국가에서 정한 재정정책에 반한 부당한 재정운영을 하여서 안 되며,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없다.

그러나 함양군은 인재육성기금과 (사)함양군장학회를 통하여 2005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다음과 같이 우회적인 편법으로 각급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다.

매년 일반회계에 기금전출금으로 10억 원 ~ 15억 원을 편성하고 인재육성기금으로 전출한 다음, 인재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전액을 (사)함양군장학회에 보조금으로 교부하였고, (사)함양군장학회에서는 기금에서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육지원청과 A고등학교 등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보조금으로 다시 교부하였다.

함양군의 이러한 재정 운영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가 아닌 인재육성기금을 통한 보조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의 공시 등) 등 일반회계로 집행할 경우 통제될 수 있는 여러 규정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해당 경비가 집행되었고, 그 결과 위법·부당한 보조금 집행과 함께 주민에게 정확한 재정운영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경상남도 소관부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령에 위반하여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장학재단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시군이 없도록 공문으로 3차례 주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함양군은 2015년까지 12억 원을 지원하다 2016년 12억 6천만 원, 2017년 15억 6천만 원, 2018년 15억 6천만 원으로 오히려 증액 편성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인재육성기금 운용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용

하여야 하며,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함양군은 기금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의 전출금 재원을 인재육성기금의 기금자산화하지 않고 관내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 재원으로 대부분 사용하였고, 특히, 2008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교부 받은 전출금 전액을 (사)함양군장학회를 거쳐 각급 학교의 보조금으로 집행하였다.

그 결과, 함양군은 2005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162억 원을 인재육성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하였지만, 대부분의 재원을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소진하였고, 다음과 같이 2018년 감사일 현재 20억 9천만 원 정도만 기금잔액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기금잔액 20억 9천만 원은 이자수입 5억 5천만 원 포함한 금액이며, 실제로는 15억 원 정도 적립)

※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운용현황 (2005 ~ 2018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수 입			지 출			잔 액
	계	군출연금	이자수입	계	위탁사업비	운영비	
계	16,742	16,190	552	14,655	14,650	3	2,090
2005	1,002	1,000	2	418	418	-	584
2006	1,018	1,000	18	383	382	1	636
2007	1,024	1,000	24	572	571	1	452
2008	1,044	1,000	44	1,002	1,000	1	43,
2009	1,085	1,000	85	1,000	1,000	-	85
2010	1,086	1,000	86	1,490	1,490	-	-403
2011	1,030	1,000	30	1,000	1,000	-	30
2012	1,243	1,200	43	1,000	1,000	-	243
2013	1,256	1,200	56	1,000	1,000	-	256
2014	1,239	1,200	39	1,200	1,200	-	39
2015	1,250	1,200	50	1,200	1,200	-	51
2016	1,302	1,260	42	1,260	1,260	-	41
2017	1,598	1,565	33	1,565	1,565	-	33
2018	1,562	1,565	-	1,565	1,565	-	-

다. (사)함양군장학회의 장학사업 추진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

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의 용도로는 1. 내고장 인재육성 장학금, 2. 군과 관학협력을 맺은 대학으로서 군 관할구역 내의 학부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는 대학교의 장학사업, 3. 장학사업과 관련한 시설투자 및 운영관리 사업, 4. 장학사업의 운영 및 관리의 전반적인 사업, 5.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하고,

제2항에 따라 기금은 인재육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6조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사)함양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8조에 따라 장학회에서 시행하는 장학사업의 범위는 1. 함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후원금의 지원, 2. 관내 학교의 기숙사 설치운영, 학습기자재의 구입지원, 교원에 대한 사기양양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 3.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수행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사)함양군장학회는 함양군 인재육성기금의 사업을 위탁받은 사업비로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장학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인재육성기금의 사용목적을 벗어나는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 제8조 제2호의 장학사업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사)함양군장학회는 인재육성기금의 위탁사업비로 추진하여서는 안 되는 2015년 B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비 173백만 원, C중학교 기숙사 건립비 250백만 원과 각급 학교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사감수당, 사감보조요원인건비, 조리보조원 복리후생비 등 교직원의 인건비성 경비를 2015년 130백만 원, 2016년 132백만 원, 2017년 142백만 원, 2018년 156백만 원(편성예산)을 보조사업으로 하여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 (사)함양군장학회의 인재육성기금 위탁사업비 부담 집행금액 현황(각급 학교별, 2015~2018년)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부담 집행항목	금 액	비 고
합 계		1,003,066	
A고등학교	3개 분야	478,112	
2015~2018	기숙사 사감수당 (700천원×9명×12월×4년)	302,400	'18년 : 진행중
	기숙사 사감보조요원 인건비 (3명분 일부금액)	157,712	
	조리실무사 복리후생비	18,000	
B고등학교	2개 분야	240,954	
2015	다목적강당 건립비	173,754	'18년 : 진행중
2015~2018	기숙사 사감수당 (700천원×2명×12월×4년)	67,200	
C중학교	2개 분야	284,000	
2015	기숙사 건립비	250,000	'18년 : 진행중
2017~2018	기숙사 사감수당	34,000	

라. 지원 근거 없는 선심성 보조금의 편법 집행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에 한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고,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할 수 없다.

그런데 함양군은 2015년부터 2018년 감사일 현재까지 법령 또는 조례의 명시적 근거 없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운영비 성격의 학생기숙사비와 통학차량운영비 등 642백만 원을 인재육성기금의 재원으로 (사)함양군장학회를 통해 우회적인 편법으로 부담하게 지원하였으며,

※ 지원 근거 없이 운영비 성격의 보조금 부담 집행현황(각급 학교별, 2015~2018년)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	부담 집행항목	금 액	비 고
합 계		641,700	
A고등학교	1개 분야	371,040	
2015~2018	재학생 기숙사비 (보조 55% : 학부모 자부담 45%)	371,040	'18년 : 진행중
B고등학교	2개 분야	246,600	
2015~2018	재학생 기숙사비 (보조 55% : 학부모 자부담 45%)	66,600	'18년 : 진행중
	통학차량 운영비 (매년 45,000천원)	180,000	
C중학교	1개 분야	14,400	
2017~2018	재학생 기숙사비 (보조 55% : 학부모 자부담 45%)	14,400	'18년 : 진행중
D중학교	1개 분야	9,660	
2017~2018	통학차량 운영비	9,660	'18년 : 진행중

2016년부터는 ●●●●●축구클럽(주), △△△△△합창단운영, ▽▽▽▽▽합창단, ☆☆☆☆☆오케스트라운영 등 각급 학교의 교육기관 외 사회 단체의 운영비를 2016년 15백만 원, 2017년 24백만 원, 2018년 71백만 원을 근거 없이 부담하게 지원하였다.

※ 장학사업비로 사회단체 등 보조금 부담 집행현황 (2016~2018년)

(단위 : 천원)

지원연도	교육기관 외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지원내역	전체금액	비 고
합 계		109,990	
2016년	- ●●●●●축구클럽(주) 운영 : 15,000천원	15,000	
2017년	- ●●●●●축구클럽(주) 운영 : 15,000천원 - △△△△△합창단 운영 : 5,000천원 - ▽▽▽▽▽합창단 운영 : 4,060천원	24,060	
2018년	- ●●●●●축구클럽(주) 운영 : 18,000천원 - △△△△△합창단 운영 : 7,500천원 - ▽▽▽▽▽합창단 운영 : 5,430천원 - ☆☆☆☆☆오케스트라 운영 : 40,000천원	70,930	진행 중

마. 보조금의 중복 지원

「지방재정법」 제32조2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함양군 E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소년 승마단 창

단 및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창단자금 160백만 원을 비롯하여 운영비를 매년 20백만 원을 지원받아 왔다.

그럼에도 함양군은 (사)함양군장학회를 통해 E초등학교의 유소년승마단 운영을 위해 2017년과 2018년 운영비로 각각 15백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처 분 요 구

① 함양군수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전면적인 시정 또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지방재정 운용과 각종 보조사업 집행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또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편성과 집행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함양군 ★★과장 지방서기관 ○○○(현, ♣♣♣♣♣장)과 지방행정사무관 ○○○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실무담당자 함양군 ★★과 지방행정주사 ○○○(현, ♣♣♣♣♣)와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징계(훈계)요구

제 목 포상금 예산편성 및 직원 근무복 구매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함양군은 2017. 8. 4. ‘정부평가 우수지자체 직원 근무복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합동평가 등 직원의 노고치하와 사기충전을 위해 파견 및 휴직자를 포함하는 전체 공무원 631명과 공무원 99명 등 총 730명에게 1인당 250천 원 상당의 근무복(활동복)을 구매하여 지급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근무복(활동복) 구매 재원 182,500천 원은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40,000천 원과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50,000천 원 및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편성으로 나머지 92,500천 원을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으로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 함양군은 2017. 10. 17. ‘직원 근무복 구매방법 검토 보고’를 통해 부서별로 단체복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구매방법을 결정하였고,

2017. 10. 24. 행정과에서는 A부서 등 30개 전 부서에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내부품의를 받았고, 2017. 10. 25. 각 부서 인원 1인당 250천 원 전체 753명으로 산출한 근무복 구매예정금액 188,250천 원을 전 부서 서무담당자 30명의 개인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부서별 구매예정금액을 지급받은 각 부서 서무담당자는 별표1 부서별 근무복 구매내역과 같이 함양군 관내 아웃도어 매장 등에서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계약 체결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한 후 근무복을 부서원들에게 배부하였다.

※ 근무복(활동복) 업체별 구매현황

구 분	합 계	ㄱ업체	ㄴ업체	ㄷ업체	ㄹ업체	기 타
부 서	30개 부서	15개 부서	8개 부서	4개 부서	4개 부서	2개 부서
수 량	753명	443명	165명	62명	58명	25명
금 액	188,490천원	110,750천원	41,250천원	15,500천원	14,500천원	6,490천원

* 차액 240천 원 : 자부담, 일부 부서 2개 업체에서 구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포상금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 제6조제2항 [별표 13]에 따르면 포상금 비목(303-01)은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 2.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3. 국제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공무원의 학자금, 4. 「지방재정법」 제48조에 의한 예산성과금 및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5.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에 대한 원인행위가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및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에게 지급 또는 대여하는 상시착용(작업복 포함) 피복비는 일반운영비(201-01)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상남도 예산부서에서는 공문으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재원은 시군의 일반적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특정목적 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함양군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으

로 예산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상남도를 거쳐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재원을 일반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되 특정 목적사업으로 예산 편성할 수 없으며, 직원의 근무복 구입비는 일반운영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함양군은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90,000천 원과 2016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인센티브 50,000천 원의 특별교부세를 일반적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고 직원 근무복 구매라는 특정 목적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7년 제2회 추경재원 92,500천 원과 함께 전체 182,500천 원의 금액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포상금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특히, 함양군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5,000천 원을 편성하여 2017. 7. 12. 18개 우수 부서에 500천 원부터 최대 2,500천 원을 지급하였고, 재정 신속집행에 대한 실적을 이미 포상한 사실이 있음에도 중복으로 포상금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집행하였다.

나. 근무복 구매방법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지방회계법」 제33조(지급명령의 제한)에 따라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

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의 1-6.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 규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제3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의 2. 일반운영비(201목) 규정에 따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하며,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 집행하여야 하며,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따라서 함양군은 업무성격상 제복 또는 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근무복을 지급할 수 없으며, 188,250천 원의 근무복 구매를 위한 업체선정을 위해서는 입찰을 거쳐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책임 하에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회계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함양군은 앞서 언급한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우수 실적에 대한 직원 노고치하와 사기진작이라는 명목으로 전 직원(휴직 및 파견자, 공무원 포함)에게 배부할 목적으로 근무복(활동복) 구매를 추진하였고,

2017. 10. 17. ‘직원 근무복 구매방법 검토 보고’를 통해 22,000천 원 이상의 물품구매는 입찰원칙이고 근무복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인지하고도,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부서별로 근무복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였다.

또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의 책임 하에 계약 및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부서별 서무담당자에게 근무복 구입예산을 지급하여 계약서 작성 등 정당한 계약절차 없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무복을 구입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낙찰율 87.995%를 적용한다면 구매예정금액 188,250천 원의 165,650천 원 정도로 계약할 수 있고, 23,085천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처 분 요 구

① 함양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훈령·예규에 따라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② 또한 포상금 예산 편성 및 집행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감독책임자 지방행정사무관 ○○○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건(처분번호 : 8)과 병합하여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함양군 ☆☆☆과(현, ◇◇◇◇◇과) 지방행정사무관 ○○○(행위시, 지방행정주사)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며, 실무담당자 함양군 ☆☆☆ 지방행정주사보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별표1 부서별 근무복 구매내역

(단위 : 원)

연번	부서명	구입업체	상품명	단가	구매금액	수량	총구매금액	비고
계	30부서					753	188,490,000	
1	AA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27	6,750,000	
2	BB	ㄴ업체	브레방자켓	250,000	250,000	23	5,750,000	
			스웨이다운2	259,000	250,000	8	2,000,000	
3	CC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39	9,750,000	
4	DD	ㄱ업체	PATRICKDOWN	330,000	250,000	34	8,500,000	
5	EE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490,000	250,000	35	8,750,000	
6	FF	ㄱ업체	남성자켓	320,000	250,000	24	6,000,000	
		ㄴ업체	여성셀레네다운	369,000	250,000	6	1,500,000	
7	GG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250,000	250,000	22	5,500,000	
8	HH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38	9,500,000	
		ㄹ업체	남성해비다운자켓	259,000	250,000	1	250,000	
9	II	ㄹ업체	오리털 점퍼(남)	429,000	250,000	15	3,750,000	
			오리털 점퍼(여)	356,000	250,000	1	250,000	
10	JJ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18	4,500,000	
11	KK	ㄱ업체	스파이더리플렉트 구스다운	350,000	250,000	68	17,000,000	
12	LL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250,000	250,000	13	3,250,000	
13	MM	ㄱ업체	페트릭스다운자켓	330,000	250,000	70	17,500,000	
14	NN	ㄱ업체	테트릭스다운자켓	330,000	250,000	21	5,250,000	
15	OO	ㄱ업체	패트릭다운자켓	330,000	250,000	22	5,500,000	
16	PP	ㅂ업체	남성콤비	550,000	260,000	18	4,680,000	초과금액 자부담
			여성정장자켓	339,000	260,000	6	1,560,000	
17	QQ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490,000	250,000	30	7,500,000	
18	RR	ㄹ업체	오리털 점퍼(남)	429,000	250,000	10	2,500,000	
			오리털 점퍼(여)	356,000	250,000	8	2,000,000	
19	SS	ㄱ업체	디아블로 3IN1(남)	298,000	250,000	8	2,000,000	
		ㄱ업체	세리오다운자켓(여)	299,000	250,000	6	1,500,000	
20	TT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29	7,250,000	
21	UU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50,000	250,000	14	3,500,000	
22	VV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490,000	250,000	15	3,750,000	
23	WW	ㄴ업체	스웨이다운2	259,000	250,000	9	2,250,000	
			브레방자켓	250,000	250,000	5	1,250,000	
24	XX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490,000	250,000	17	4,250,000	
25	YY	ㄹ업체	덕다운자켓	642,000	250,000	8	2,000,000	
			덕다운자켓	429,000	250,000	6	1,500,000	
26	ZZ	ㄱ업체	다운자켓	350,000	250,000	19	4,750,000	
27	AB	ㄹ업체	오리털 점퍼(남)	429,000	250,000	8	2,000,000	
			오리털 점퍼(여)	356,000	250,000	6	1,500,000	
28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490,000	250,000	17	4,250,000	
29	BC	ㄱ업체	스파이더자켓	320,000	250,000	6	1,500,000	
		ㄴ업체	셀레네다운	399,000	250,000	7	1,750,000	
30	CD	ㄷ업체	롯데네오다운자켓	250,000	250,000	16	4,000,00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징계(훈계)요구

제 목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 관리위탁 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 부적정

가. 미등록 야영장업 업체 현황

업체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불법행위 내용	비 고
◆◆◆◆ 캠핑장 (○○○)	aa면 bb리 626-2 외 2필지	◦ 야영장업 미등록 ◦ 하천부지 불법 점유 및 무단 훼손	
⊙⊙⊙⊙⊙ 야영장 (○○○)	aa면 cc리 111 외 2필지	◦ 야영장업 미등록 ◦ 개발행위 미허가(농지 및 산지 무단 훼손)	

나.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내용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및 제4조(등록)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는 야영장업은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고, 이를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3조(벌칙) 제2항에 따르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하천법」 제4조(하천관리의 원칙) 제2항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개발행위의 허가)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함양군은 관내 야영장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업체가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위 현황과 같이 aa면 소재 2개 업체가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특히, ■■■■■ 캠프장(대표자 : ○○○)의 경우 bb천의 하천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 및 훼손하여 야영장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며, ㉠㉠㉠ 야영장(대표자 : ○○○)은 농지 및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무단 훼손하여 야영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형사고발 및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야영장업 미등록 업체 불법영업 현황자료

- ■■■■■ 캠프장



현장 위성사진 : aa면 bb리 626-2 일원



하천부지 불법 점유 및 무단 훼손(출처:업체 홈페이지)

* 하천부지 현황 : 함양군 bb면 bb리 1281, 천, 253,193㎡, 국토교통부

- ㉠㉠㉠ 야영장



현장 위성사진 : aa면 cc리 111 일원



개발행위 미허가 현황(출처:업체 홈페이지)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업체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반기별로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함양군은 야영장업 등록업체가 월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반기별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안내 또는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2. 군 소유 야영장(행정재산) 관리위탁 업무 처리 부적정

가. 군 소유 야영장 관리위탁 현황

야영장명 (등록완료일)	야영장 현황	관리위탁 현황	비고
AA 오토캠핑장 (2015. 5.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재 지 : dd면 ee리 764 외 부지면적 : 11,994㎡ 조성사업비 : 2,170백만원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캠핑장 : 28면 - 케빈하우스 : 7동 - 기타 : 캠핑센터, 관리동, 화장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간 : 2017.12.6. ~ 2018.12.31. 수탁자 : ○○○ 위탁금액 : 23,163천원 선정방법 : 가격입찰 및 제안서평가 	
BB 오토캠핑장 (2017.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 재 지 : dd면 ff리 727-1 외 부지면적 : 9,704㎡ 조성사업비 : 2,709백만원 주요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토캠핑장 : 25면 - 케빈하우스 : 6동 - 기타 : 캠핑센터, 관리동, 세척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탁기간 : 2017.5.22. ~ 2018.12.31. 수탁자 : ○○○○○○○○영농법인 위탁금액 : 35,000천원 선정방법 : 가격입찰 및 제안서평가 	

나.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내용

① 관리위탁을 위한 입찰업무 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제1항에 따라 일반입찰과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하고,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함양군은 군 소유 2개소 야영장의 관리위탁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참가자격을 ‘함양군에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였고, 실시 근거가 없는 제안서평가 과정을 입찰절차에 추가하여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AA오토캠핑장의 경우 3차례의 유찰을 거쳐 4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었고 BB오토캠핑장은 1차례 유찰을 거쳐 2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었으며, 불필요한 제안서 평가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평가위원 수당 지급, 소모적인 절차 진행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관리위탁을 추진한 2개소 모두 낙찰자 결정 당시 입찰 참가자가 1명뿐임에도 유찰 처리하지 않고,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여 부당하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② 위탁료 산출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고,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함양군은 군 소유 행정재산인 야영장의 관리위탁을 위하여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캠핑장 사용료 등의 수입과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지출의 원가분석을 통해 정당한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함양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여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계산하는 사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위탁료를 산출하였다.

처 분 요 구

① 함양군수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야영장업을 등록하지 않고 하천부지 무단점유 및 훼손, 무허가 개발행위 등을 통한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2개 업체에 대하여 형사고발, 원상회복, 자진폐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야영장 등록 및 안전관리, 관리위탁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② 또한 야영장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고 관리위탁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함양군 ■■■■과 지방행정주사 ○○○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고, 실무책임자 지방세무주사 ○○○과 지방행정주사 ○○○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훈계 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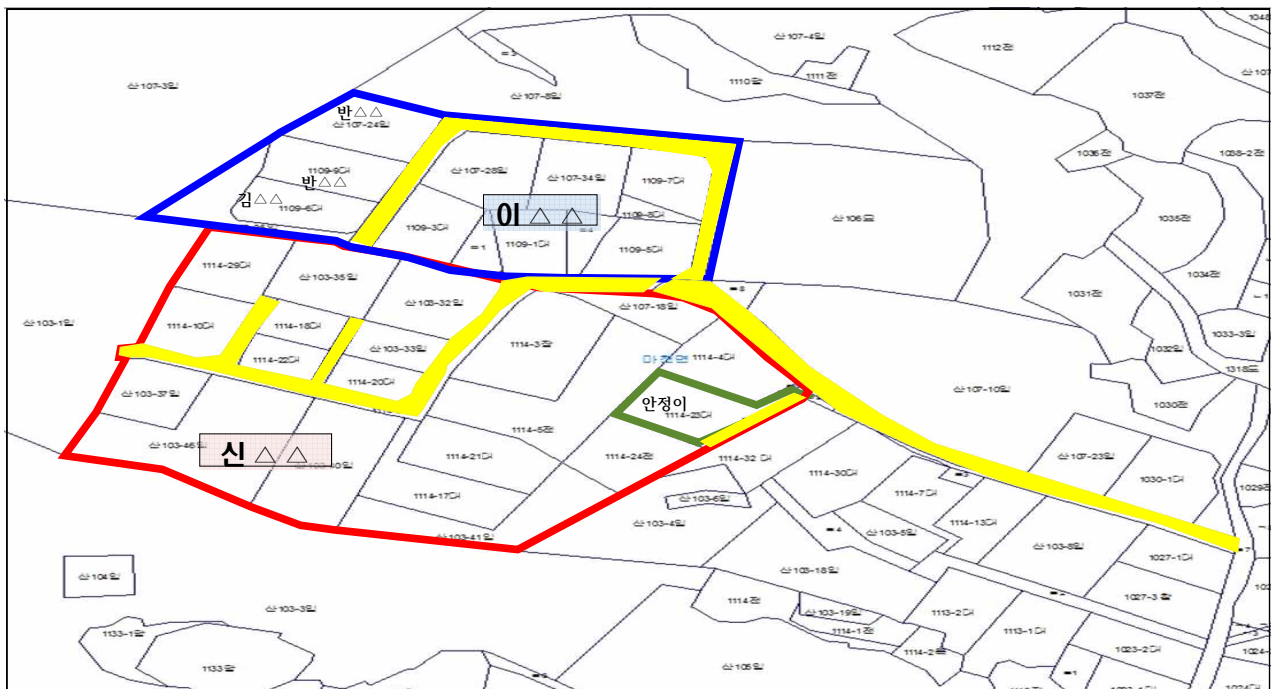
함양군 ○○과에서는 2015. 5.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함양군 ○○면 ○○리 산 ○○번지 일원에 신△△, 이△△의 건축허가 신청건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다.

【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산지전용) 현황 】

연번	대지위치	신청인	허가면적 (㎡)	건축(개발)규모	허가목적	허가일자	비고
합 계		31건	24,167				
신△△ 소계		22건	15,903				
1	○○면 ○○리 산○○	신△△	783	1동/1층, 110.7㎡	단독주택	‘12.9.3	
2	○○면 ○○리 산○○	신△△	1,032	2동/1층, 155.7㎡	단독주택	‘13.7.3	
3	○○면 ○○리 산○○	신△△	855	1동/1층, 110.7㎡	단독주택	‘13.5.8	
4	○○면 ○○리 산○○	신△△	1,011	1동/1층, 110.7㎡	단독주택	‘13.6.13	
5	○○면 ○○리 산○○	신△△	405	1동/1층, 110.7㎡	단독주택	‘13.5.8	
6	○○면 ○○리 산○○	신△△	474	2동/1층, 143.7㎡	단독주택	‘13.7.15	
7	○○면 ○○리 산○○	신△△	991	2동/1층, 170.7㎡	단독주택	‘13.7.9	
8	○○면 ○○리 산○○	신△△	990	2동/1층, 155.7㎡	단독주택	‘13.7.3	
9	○○면 ○○리 산○○	신△△	728	1동/1층, 99.9㎡	단독주택	‘17.3.6	
10	○○면 ○○리 산○○	신△△	1,609	1동/1층, 116.38㎡	단독주택	‘18.3.19	
11	○○면 ○○리 산○○	신△△	2,313	3동/1층 299.91㎡	단독주택	‘17.3.6	
12	○○면 ○○리 산○○	신△△	478	1동/2층, 152.7㎡	단독주택	‘13.3.27	
13	○○면 ○○리 산○○	신△△	404	10번과 합병	단독주택	‘13.3.27	
14	○○면 ○○리 산○○	신△△	861	1동/2층, 152.7㎡	단독주택	‘13.3.7	
15	○○면 ○○리 산○○	신△△	853	1동/1층, 152.2㎡	단독주택	‘12.12.10	
16	○○면 ○○리 산○○	신△△	139		진입도로		
17	○○면 ○○리 산○○	신△△	18		진입도로		
18	○○면 ○○리 산○○	신△△	266		진입도로		
19	○○면 ○○리 산○○	신△△	188		진입도로		

연번	대지위치	신청인	허가면적 (㎡)	건축(개발)규모	허가목적	허가일자	비고
20	○○면 ○○리 산○○	신△△	579		진입도로		
21	○○면 ○○리 산○○	신△△	353		진입도로		
22	○○면 ○○리 산○○	신△△	573		진입도로		
이△△ 소개		9건	8,264				
1	○○면 ○○리 산○○	반△△	904	1동/1층, 99.76㎡	단독주택	'15.8.10	
2	○○면 ○○리 산○○	반△△	836	1동/1층, 99.76㎡	단독주택	'15.8.11	
3	○○면 ○○리 산○○	김△△	737	1동/1층, 47.25㎡	단독주택	'13.8.1	
4	○○면 ○○리 산○○	이△△	780	3동/1층, 84㎡	창고	'12.7.26	
5	○○면 ○○리 산○○	이△△	971	1동/1층, 119.79㎡	단독주택	'15.6.11	
6	○○면 ○○리 산○○	이△△	1,081	1동/1층, 82㎡	소매점	'15.6.11	
7	○○면 ○○리 산○○	이△△	870	1동/1층, 119.79㎡	단독주택	'15.6.11	
8	○○면 ○○리 산○○	이△△	834	1동/1층, 84.27㎡	단독주택	'15.6.11	
9	○○면 ○○리 산○○	이△△	1,251		진입도로		

【 개발행위(토지분할) 후 지적 현황 】



2. 관계법령 및 위법 부당사항

가. 개발행위허가 규모 및 진입도로 산정 부적정

「국토계획법」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1항에서는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고, 제1호에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서는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고, 다음 제3호나목에서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3-2-1(도로) (1) 진입도로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이상, 5천㎡ 이상 3만㎡미만은 6m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폭을 확보하여야 하고, (3) 차량이 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고 하고, 제1호나목에서 기반시설은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3-2-5(기반시설) 제(1)호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라 함은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의미하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시행령 제53조제3호나목의 괄호규정에 따라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하고, 동일인이 서로 접한 필지에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시차를 두어 개발행위허가를 신청시에는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하나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허가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여러 필지를 정형화 하는 방법 등으로 각각의 건축을 하는 경우 등 하나의 사업으로 개발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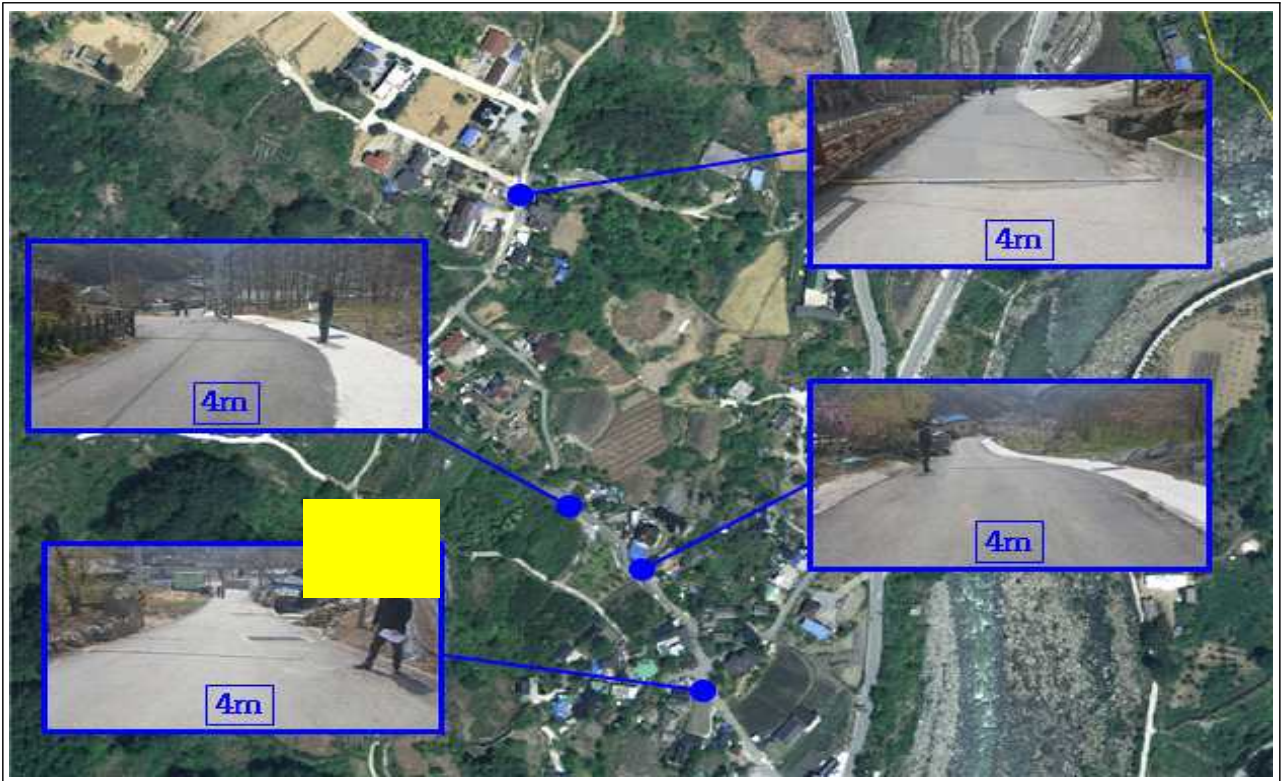
여러 필지에 하나의 건축물(여러 동의 건축물이 하나의 시설인 경우 또는 공작물 포함)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여러 필지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여러 필지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행위 허가신청건에 대해서 개발행위면적을 산정하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하나의 개발행위인데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할 목적으로 명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개발행위 면적으로 산정하고, 개발행위허가규모 산정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의 성격, 토지소유 여부 등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함양군 ○○과의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현향을 검토한 결과, 택지식으로 분할된 토지 중 도로 사용목적의 모든 개발행위는 신△△로 신청되었고, 또한 서로 접한 필지에 시차를 두어 신청한 00건의 개발행위 규모가 13,787㎡으로(※ 진입도로 면적 2,116㎡ 제외) 부지면적이 5,000㎡를 초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최소 6m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함양군 ○○면 ○○리 산○○번지 외 00필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하였다.(※ 기존 마을안길 확장(L=0.6km, B=6.0m) 시 소요비용 : 약 00억 원 정도)

그리고 개발행위 신청지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안길(도로 폭 4m 미만)을 활용하도록 허가되어, 신△△가 택지식으로 분할한 00필지와 이△△이 택지식으로 분할한 8필지에 모두 입주하게 되면 기존 마을 주민들의 차량 이용에 대한 불편사항 및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생활 불편(소음, 진동 등) 사항 등의 발생이 예상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건축(개발행위)허가 진입도로(마을안길) 현황】



또한, 감사기간 중 신△△의 허가지 주변 개발(부지조성)사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이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을 법령상 절차를 회피할 할 목적으로 개별 건축허가로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다.

【개발행위 허가지 현황(전원주택·택지분양)】



【건축(개발행위) 허가지 부지조성공사 현황】



나. 불법 산지전용지 및 농지전용지 지도·단속 업무 부적정

「산지관리법」 제3조(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44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제53조(벌칙) 및 제54조(벌칙)에서 산지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산림의 공익 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지전용은 자연친화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에게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하여야 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제42조(원상회복 등), 제57조(벌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등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 산지전용지 및 불법 농지전용지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함양군 ○○과와 ○○에서는 ○○면 ○○리 산○○, 산○○번지 00필지(훼손 면적 2,006㎡)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인접 지역인 ○○면 ○○리 ○○번지(훼손 면적 1,918㎡)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건축 등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 훼손지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① 함양군수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되게 개발행위허가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택지 및 전원주택 분양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 처분하고, 향후 개발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환경·개발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예시, 관리대장 등)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함양군수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오△△, 이△△ 및 김△△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번호 : 1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 ○○담당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5.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 태양광발전시설 등 개발사업 신청에 따라 총 00건에 대한 농지전용을 허가(협의)하였다.

감사기간 중 위 개발사업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사항을 확인한 결과, 「농지법」, 「농지업무편람」 및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에 따라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 1인이 신청한 것으로 제한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부적정하게 허가하였다.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자		건축허가 소재지	허가일자	허가면적(㎡)			비고
	성명	주 소			소계	건축 부지	기반 시설	
합 계(28건)					18,863	16,779	2,084	
소 계(3건)					2,273	1,820	453	
1	고△△	○○시 ○○구 ○○로 ○○	○○면 ○○리 ○○	2017.12.04.	785	660	125	진입로
	이△△	○○도 ○○시 ○○로 ○○ BB아파트 4차@ 00동 00호	○○면 ○○리 ○○	2017.12.04.	660	660		
	고△△	○○도 ○○시 ○○구 ○○동 ○○ CC팰리스 00동 00호	○○면 ○○리 ○○	2017.12.04.	828	500	328	진입로
소 계(2건)					1,546	1,313	232	
2	신△△	○○시 ○○구 ○○로 ○○길 ○○, 00호	○○면 ○○리 ○○	2017.11.13.	628	523	105	진입로
	김△△	○○시 ○○구 ○○로 ○○ DD아파트 00동 00호	○○면 ○○리 ○○	2017.11.13.	917	790	127	진입로

연번	신청자		건축허가 소재지	허가일자	허가면적(㎡)			비고
	성명	주 소			소계	건축 부지	기반 시설	
소 계(2건)					1,994	1,847	147	
3	강△△	○○시 ○○로 ○○ 00동 00호 (○○동, EE마을 00단지)	○○면 ○○리 ○○	2017.04.26.	999	852	147	진입로
	김△△	○○시 ○○로 ○○	○○면 ○○리 ○○	2017.04.26.	995	995		
소 계(7건)					2,288	2,110	178	
4	하△△	○○시 ○○구 ○○로○○길 ○○, 00호(FF동0가)	○○면 ○○리 ○○	2016.11.18.	244	244		
	하△△	○○시 ○○로○○번길 ○○, 00동 00호(○○동, GG아파트)	○○면 ○○리 ○○	2016.11.18.	410	410		
	김△△	○○시 ○○구 ○○길 ○○, 00동00호(○○동, HH아파트)	○○면 ○○리 ○○	2016.11.18.	297	297		
	김△△	○○시 ○○읍 ○○길 ○○, 00동 00호(II아파트)	○○면 ○○리 ○○	2016.11.18.	422	422		
	김△△	○○시 ○○읍 ○○길 ○○, 00동 00호(II아파트)	○○면 ○○리 ○○	2016.11.18.	250	250		
	정△△	○○시 ○○구 ○○로 ○○, 00동 00호(JJ아파트)	○○면 ○○리 ○○	2016.11.18.	441	263	178	진입로
	정△△	○○시 ○○구 ○○로 ○○, 00동 00호(JJ아파트)	○○면 ○○리 ○○	2016.11.18.	224	224		
소 계(3건)					2,996	2,882	114	
5	이△△	○○군 ○○읍 ○○로 ○○길 ○○, 00동 00호(KK아파트)	○○면 ○○리 ○○	2016.04.16.	999	999		
	이△△	○○군 ○○읍 ○○길 ○○	○○면 ○○리 ○○	2016.04.16.	999	981	18	진입로
	이△△	○○시 ○○로 ○○길 ○○	○○면 ○○리 ○○	2016.04.16.	998	902	96	진입로
소 계(2건)					1,065	1,065		
6	모△△	○○시 ○○로 ○○번길 ○○	○○면 ○○리 ○○	2016.03.11.	531	531		
	(주)AA (황△△)	○○시 ○○로 ○○번길 ○○(○○동)	○○면 ○○리 ○○	2016.03.11.	534	534		
소 계(2건)					1,845	1,845		
7	문△△	○○시 ○○구 ○○로 ○○, 00동 00호(LL아파트)	○○면 ○○리 ○○	2016.02.04.	989	989		
	송△△	○○시 ○○구 ○○로 ○○번길 ○○	○○면 ○○리 ○○	2016.02.04.	981	981		
소 계(3건)					1,714	1,110	604	
8	홍△△ 배△△	○○시 ○○구 ○○로 ○○	○○면 ○○리 ○○	2015.09.09.	640	640		
	김△△	○○시 ○○면 ○○길 ○○, 00동 00호(MM아파트)	○○면 ○○리 ○○	2015.09.09.	470	470		
	홍△△ 배△△ 김△△	○○시 ○○구 ○○ ○○시 ○○면 ○○길 ○○, 00동 00호(NN아파트)	○○면 ○○리 ○○	2015.09.09.	604		604	진입로
소 계(1건)					1,156	800	356	
9	강△△	○○시 ○○구 ○○로 ○○, 00동 00호	○○면 ○○리 ○○	2015.07.16	1,156	800	356	
소 계(2건)					1,987	1,987		
10	홍△△	○○군 ○○읍 ○○길 ○○, 00동 00호(OO아파트)	○○면 ○○리 ○○	2015.04.30	997	997		
	임△△	○○군 ○○읍 ○○길 ○○, 00동 00호(PP아파트)	○○면 ○○리 ○○	2015.04.15.	990	990		

2. 관계법령 및 위법 부당사항

가.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부적정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1항에서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이하 "개발진흥지구"라 함)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제3항 제2호에서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을 말하고, 제5항에서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결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결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농지업무편람」 제6장 농지의 전용 다. 전용허가제한 (3) 허가제한 시설
③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며, <참고사항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및 제5항 관련>에서 “같은 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한 필지의 개념과는 다르며, 동일한 사업 목적을 위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전용하였을 경우에도 동일부지에 해당되는 반면, 한 필지의 농지를 두 종류 이상의 사업목적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전용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부지에 해당되지 않고, 하나의 부지에 전용목적사업별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필지

를 분할을 하는 등)하지 않고 2종류 이상의 전용목적사업을 실현하고자 할 경우 그 부지는 동일 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설별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 적용지침」(농림축산식품부, 2000. 9. 7.)에서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1필지)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각각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허가제한면적(1,0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법」에 따른 “농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시 2인 이상이 동일한 농지를 단독주택 부지로 전용하고자 농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할 경우와 제삼자의 명의를 빌려 2인 이상이 연접한 농지를 동일한 전용목적 시설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1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제한면적을 적용하여 1,000㎡를 초과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과 같이 2017. 12. 04. ○○시 ○○구 ○○로 ○○, QQ아파트 00동 00호 고△△ 등 3명이 토지소유자(고△△)의 사용승낙을 받아 동일한 필지(함양군 ○○면 ○○리 ○○번지(보전관리지역)에 단독주택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 없이 「농지법」에 따른 단독주택의 제한면적(1,000㎡)을 초과하여 농지전용 허가(협의)하는 등 총 00건, 00㎡의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건축허가(단독주택) 연접개발 후 불법 펜션 운영 부적정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8(지도·감독) 및 제89조(사업장 폐쇄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

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농어촌민박의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함)을 징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주택 연면적 230㎡ 미만으로, 반기 1회 이상 농어촌 민박의 규모, 시설기준 준수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 규모나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중인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감사기간 중 위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중 연번 ‘5’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아래 ‘불법 숙박시설 운영 및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과 같이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지역에서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규모나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이 ‘○○글램핑&펜션’의 상호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친, 이△△, 이△△ 형제)

【연번 ‘5’ 농어촌민박 신고 현황】

지정일자	대 표 자		민박명칭	위 치		주요시설
	주 소	성 명		소 재 지	농원규모(m ²)	
16.07.29	○○면 ○○로 ○○	이△△	○○글램핑화이트	○○면 ○○로 ○○	152.20	숙박,화장실 등
16.07.29	○○면 ○○로 ○○	이△△	○○글램핑오렌지	○○면 ○○로 ○○	117.09	숙박,화장실 등
16.07.29	○○면 ○○로 ○○	이△△	○○글램핑블루	○○면 ○○로 ○○	170.97	숙박,화장실 등

또한, 국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시설물을 설치(족구장)하고 있음에도 함양군에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불법 숙박시설 운영 및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조치할 사항 ① 함양군수는 건축물의 무단 용도변경, 농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부적정한 농어촌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군 ○○면 ○○리 ○○번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농지법」 등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농지전용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령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지전용 허가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예시, 관리대장 등)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함양군수는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이△△, 박△△, 홍△△ 및 임△△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번호 : 1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2017. 5.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00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직접사용목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없이 아래 표와 같이 3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에 대하여 부적정하게 허가(협의)하였다.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협의) 부적정 현황】

연번	신청자	허가 소재지	허가일자	허가면적(㎡)	허가목적	용도지역	비고
소 계				74,112			
1	오△△ 외 2인	○○면 ○○리 ○○	2014.8.28.	7,799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생산관리	
	(주)AA	○○면 ○○리 ○○, ○○	2014.8.28.	9,691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생산관리	
2	(주)BB	○○면 ○○리 산○○ 외 6필지	2014.10.1	31,002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보전지역	
3	(주)CC	○○면 ○○리 산○○, 산○○	2016.10.28	25,620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계획지역	

2. 관계법령 및 위법 부당사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고 함)제4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

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대상 등)에서 법 제4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의 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에서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확인 업무처리 기준」(국토교통부, 2015. 6. 15.)에서 허가권자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및 개발업 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아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인허가 면적기준으로 등록대상에 해당됨에도 인허가 신청자가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인허가 등을 받은 토지·건축물 등 소재지 및 인허가 신청자의 영업소 소재지(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외 목적(직접사용)”으로 신고하여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시·도지사가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법」 제36조(벌칙)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개발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한자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에 해당되는 규모(토지면적이 5,000m² 또는 연간 10,000m²)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인허가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을 확인한 후 “공급 외 목적(직접사용)”을 이유로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후 인허가 명의변경 등 일체의 공급행위가 제한됨”을 반드시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인허가와 동시에 부동산개발업 비등록 대상확인서 및 인허가 관련 서류 사본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인허가 등을 받고 인허가 변경(인허가 명의 양도 등 사업주체 변경) 또는 타인에게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4. 8. 28. ~ 2016. 10. 28.기간에 함양군 ○○면 ○○리 ○○번지 외 1필지 (주)CC 등 3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동산개발을 허가(협의)하면서, 토지의 면적이 10,000m² 이상의 부동산개발에 해당되어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신고서’ 또는 ‘부동산개발업 비등록대상(공급 외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사실 또는 비등록 대상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허가(협의) 처리한 사실이 있다.(※ 오△△ 외 2인과 (주)DD의 개발 신청건은 2014. 4. 29.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하나의 사업(버섯재배사 및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으로 협의 요청하였으며, 부동산개발 대상지 토지소유권이 오△ 외 3인이고, (주)DD은 토지사용승락을 득하여 사업추진함에 따라 동일사업자로 판단)

조치할 사항 ① 함양군수는 2014. 8. 28.부터 2016. 10. 28. 기간에 함

양군 ○○면 ○○리 ○○번지 등 총 00건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건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실 확인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처리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함양군수는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 오△△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번호 : 1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의·훈계 요구

제 목 하천구역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설치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함양군 ○○과에서는 2009년 군정설명회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0. 10. 14.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조성공사를 준공하였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하천법」 제8조(하천관리청)에 따라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천’을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위임사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서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에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고,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95조(벌칙)에서 법 제33조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제33조제1항

(제5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공작물의 제거 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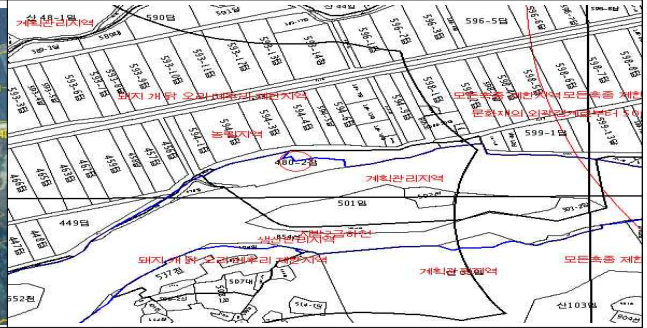
함양군에서는 2009년 군정설명회에서 외부이용객이 ○○공설운동장 바닥 불편해소, 인조잔디구장 조성을 전지훈련 유치 등 지역 주민들의 건의와 건전한 생활체육 참여 및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면의 체육시설의 필요성으로 2010. 6. 1. '○○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0. 10. 14.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조성사업을 준공하였다.

그러나 함양군 ○○과에서는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조성공사가 토지이용계획 상 지방2급하천(○○천) 구역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행위에 대하여 하천관리부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하천구역내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천 하천기본계획(2003. 12.)에 따라 하천정비 시 축구장의 일부에 제방이 설치되어 축구장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는 등 업무를 태만히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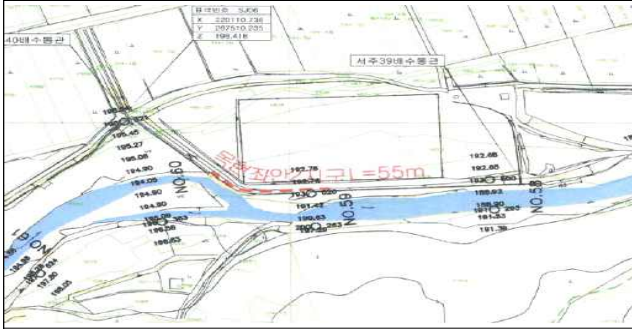
또한, 함양군 ○○과에서는 하천구역 내에 불법적으로 축구장 등 고정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관련규정에 따라 공작물의 제거 명령 등의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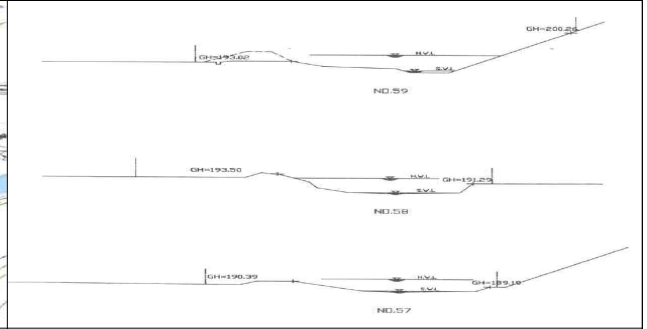
생활체육공원(축구장) 하천점유 현황



토지이용계획(지방2급하천)



서주천 하천기본계획(2003.12.)<평면도>



서주천 하천기본계획(2003.12.)<횡단면도>

조치할 사항 ① 함양군수는 「하천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하천 구역내에서 2010. 10. 14. 준공한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 등을 설치하면서 하천부서와 협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하천정비계획 및 하천구역 변경시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③ 함양군수는 ○○면 생활체육공원(축구장)을 설치하면서 「하천법」에 따라 하천구역내 하천기본계획의 적합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관리부서에 협의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서△△, 정△△ 및 조△△를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일련번호 : 1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2016년~2017년 내방객 등에 제공하기 위한 ■■ ■■ ■■ ■■■ 기념품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 관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구입)하여 수불부에 등재 및 관리하고 있다.

2. 기념품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2조(예산의 편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업무 편람 등)제2항 및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소규모 용역비 등으로 집행하고, 내방객에 제공하는 기념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6년 부터 2017년 까지 내방객 등에 제공하기 위한 ■■ ■■■ ■■■ 기념품을 제작·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아

닌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요구), 총○○백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념품 수불부를 작성·관리하면서 수령자를 작성하지 않고 출납된 개수만 기록하였고, 일부 구입물품은 등재하지 않는 등 기념품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분할발주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 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 준」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기본적으로 통합발주를 해야 하며, 예산 집행과정에서 단일사업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통합발주 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동 기준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해서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내방객 등에 제공하기 위한 ■■ ■■■ ■■■■을 제작·구입하면서 아래 “기념품(수저세트) 구입 현황”과 같이 지정정 보처리장치(G2B)에 의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같은 물품을 같은 업체에 매년 수차례 분할하여 계약(의 퇴) 및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현 ●●●●과) 지방행정사무관 ㉠㉡㉢은 2014. 7. 4.부터 2017.12.31.까지, @@@@과 지방행정주사 ㉣㉤㉥은 2016. 1. 1.부터 현재 까지 ‘기념품 구입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 1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민간위탁금 등 예산편성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2015년~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법령 및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을 편성(◆건)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읍면별 ○○백만 원에서 ○○○백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여 포괄사업비로 총 ○○○백만원을 편성하였다.

2.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자에게 지급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는 군수는 수

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함양군 민간 위탁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고, 제13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2015년~2018년 함양군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 법령 및 조례도 없이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104조를 정면으로 위배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위탁사업자 선정절차, 위탁계약 절차 등 관련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부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 ○○○○○ 지원사업(2015년~2018년)”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임에도 확인도 없이 민간위탁금 예산에 편성하는 등 예산편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 @@@@과에서는 아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현황”과 같이 2015년~2018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규모,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예산에 반영하고 예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구체적인 사업의 수요조사나 추진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읍면별 ○○백만 원에서 ○○○백만 원씩 균등하게 배분하여 포괄사업비로 총 ○○○백만원을 편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 지방행정주사 ●●●은 2016. 1. 1.부터 현재까지, @@@@과 지방세무주사보 ●●●는 2017. 1. 1.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금 및 주민숙원사업비 예산편성’ 등 업무를 담당한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계)

【번호 : 1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경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유재산 매각업무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현황

- ◁▷군 ☆☆과는 '15. 2월 ◁▷군 ♀♂면 △△리 62번지, 지목 전(대장 전, 현황 전), 879㎡(이하 “매각 부동산”라고 한다)의 공유재산을 ○○○(♂♂면 □□길 277번지)에게 경작조건으로 '15. 2. 2.부터 '19. 12. 31.까지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 '18. 3.(신청서에 날짜 미기재) ○○○은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군 ☆☆과는 '18. 3. 15.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18. 3. 12.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 확인 결과 “ '15.2.2.부터 현재까지 매수 신청자가 주택용도(마당)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며, 현장조사 결과 행정재산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었고, 매수신청자 외 1명의 토지가 인접해 있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군유지가 없는 필지이므로 매각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출장보고를 하였다.
- '18. 3. 19. 공유지 일반재산 매각계획을 수립하면서 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15. 2. 2.부터 현재까지 매수 신청자가 주택용도(마당)로 대부하고 있는 재산으로 연접토지 소유자인 ○○○씨와 ◎◎◎씨가 토지 활용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므로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매각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으로 결재를 득하였다.
- ◁▷군 ☆☆과는 '18. 3. 20. ○○○등 2명에게 입찰기간('18. 3. 23. ~ '18. 4. 2.)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 결정 통지 및 지명경쟁입찰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
- '18. 4. 3. ○○○은 입찰금액 70,010,000원으로 단독 입찰하여 매각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공유재산 매각 업무 부적정

1)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서는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제1항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99조(벌칙)에서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호에서는 일반재산이 해당 재산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부당 사항

- <<군 ☆☆과에서는 '18. 3. 12. 매각 부동산의 매각결정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경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택용도(마당)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18. 3. 19. 매각계획을 수립하면서 매각 부동산이 대부목적인 경작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마당)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것을 볼 때 출장당시에 매각 부동산의 용도가 경작이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 또, 매각 부동산을 다음지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부시점 인 2015년 이전부터 매각 부동산에 불법 건축물이 축조되어 있었다.
- 따라서, <<군 ☆☆과에서는 매각 부동산에 건축물이 축조된 것을 확인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83조제1항, 같은 법 제99조에 의거 불법 건축물, 자동차 비가림막 및 마당(잔디를 깔아놓음)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매각한 사실이 있다.
- 또한,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에 의거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지명경쟁으로 매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매각 부동산과 연접된 토지는 4필지(△△리 61, 63-1, 64-1, 산61-1)로 소유자가 3명이므로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 전원을 지명하여 입찰을 붙여야 하나, ◇◇◇(△△리 산61-1번지 소유자)를 제외한 ○○○과 ◎◎◎(△△리 61번지 소유자)에게만 입찰의 기회를 제공한 점을 살펴보면,
 - ♣♣면 △△리 61번지는 공부상 ◎◎◎ 소유이나, 감사일 현재 확인 결과 ○○○이 점유하여 △△리 61번지(◎◎◎ 소유)와 매각 부동산을 일단지로 만들어 마당 및 건축물을 축조하여 ○○○ 소유처럼 사용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를 제외하고 ○○○과 ◎◎◎에게 지명입찰로 매각업무를 추진했다고는 하나 ○○○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은 행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따라서, <<군 ☆☆과는 매각 부동산의 매각업무를 추진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행정주사 ★★★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행정서기보 §§§의 행위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 ① <<군수는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행

정주사 ★★★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제2호의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매각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과 지방행정서기보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군수는 이 건과 관련하여, 불법 축조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시정), 앞으로 법령에 위배되게 공유재산 업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담당자에 대한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번호 : 1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산촌체험생활관 등 관리위탁 업무 처리 소홀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과)
내	용	

1. 현황

- ▷▷군 ○○○○과에서는 2016. 2. 18. ▷▷군 백전면 ☆☆리 327-1번지 234㎡의 커뮤니티센터 및 ▷▷군 백전면 ☆☆리 809-5번지 128.52㎡의 산촌체험생활관을 완공한 후 □□회에 2016. 11. 15. 관리위탁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 제3조에 위탁기간을 3년('16.11.15~19.11.14)으로, 제5조에 사용료는 ●●마을회에서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6조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를 □□회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관리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 2016. 11. 15. ▷▷군 서상면 ☆☆리 1074-6번지 239.52㎡, 693.89㎡의 다목적 회관을 완공한 후 ☆☆면소재지운영위원회에 2018. 3. 28. 위탁기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관리위탁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면서,
 - 제2조에 위탁기간을 10년('16.12.27~26.12.26)으로, 제4조에 사용료는 서상면 소재지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제5조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체를 서상면소재지운영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제6조에 서상면소재지 운영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시설물 및 장비에 대하여 손해보험 및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 증서를 협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에게 제출하도록 관리위탁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관계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하고,

-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제6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고,

- 제1호에서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이용료 등,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 전대(轉貸)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입, 그 밖에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수입,
- 제2호에서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 제2016-50호, 2016. 12.29.)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제4항에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별첨)의 내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제1항에서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 허가 범위 및 위탁 내용,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관리위탁 기간, 위탁료나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제2항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에서는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제1항에서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하기 위하여 ▷▷군 민간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제13조(협약체결등) 제1항에서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제18조(재계약)제2항에서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능력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위탁료 산정, 예정가격 작성, 위·수탁계약 체결 등 관리위탁을 하여야 하며,
- 「▷▷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민간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 같은 법 제13조에 의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18조에 의거 군수는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관리 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능력 등을 심사받은 후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군 ○○○○과에서는 아래 “산촌체험생활관 등 관리위탁 현황”과 같이 관리위탁을 하면서, 위탁료 산정, 예정가격 작성 등 관련규정에 따

라 커뮤니센터 등 3곳과 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 민간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며,
-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함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없이 위탁료의 유·무료 내용이 관리위탁 협약서에 나타나지 않고,
- 협약서의 공신력을 위하여 협약체결 후 협약내용을 반드시 공증하여야 함에도 공증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특히, 다목적회관의 관리위탁 협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체결하여야 함에도 10년으로 체결하여 법령을 위반하였으며,

- 2016. 11. 15.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위탁 재산에 대한 재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한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에 제출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있음에도 <<군 ○○○○과에서는 인지 못하는 등 아래 “산촌체험생활관 등 관리 위탁 현황”과 같이 관리위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산촌체험생활관 등 관리위탁 현황

(단위 : m², 원)

연번	소재지	건축 면적	위탁 면적	위탁기간	관리수탁자	위탁료	공증	계약 기간	보험 가입
1	커뮤니센터	234	234	‘16. 11. 15. ~ 19. .11.14	○○○ 운영위원회	0	×	3년	○
2	산촌체험생활관	128.52	128.52	‘16. 11. 15. ~ 19. .11.14	“	0	×	3년	○
3	다목적회관	239.52 693.89	239.52 693.89	‘16.12.27. ~ '26.12.26.	☆☆☆소재지 운영위원회	0	×	10년	×

징계요구 양정

공유재산 민간 관리위탁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시설주사 ◇◇◇과 실무담당자 ○○○○과 지방시설주사보 △△△의 행위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① <<군수는 공유재산 민간 관리위탁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 지방시설주사 ◇◇◇과 실무담당자 ○○○○과 지방시설주사보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의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② ◁◁군수는 앞으로 공유재산 민간 관리위탁 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9】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지역에 산재해 있는 향노화 자원과 심마니의 역사적 자료를 발굴·보전하여 역사 문화자원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58백만원의 사업비로 ‘향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이하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이라 한다)’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다.

[표1] 향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입찰참가자수	도급자	계약방법
향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17. 04.21.	'17.04.25. ~ '17.09.04.	58,490	5	◇◇◇◇ 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

2. 협상에 의한 계약 정량적 평가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의하면 2단계 입찰 및 협

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3절 사전심사 배점기준에 의하면 입찰 참가업체의 경영상태의 심사를 신용평가방식에 의할 경우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제출하는 신용평가 결과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선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 입찰 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중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인 경영상태평가를 신용평가등급으로 정하면서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중에서 택일하지 아니하고 아래 [표2, 표2-1] 과 같이 3개 기준 모두를 제안서 평가배점에 반영하여 신용평가등급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결여되게 하였다.

[표2] 향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 가 항 목(배점 : 20)		배점기준	배점
기술인력 보유현황(6)		평정 5점 이상 ~ 평정 2점 미만	6.0 ~ 2.0
사업수행 실적(6)	수행금액	2억 이상 ~ 5천만원 미만	3.0 ~ 1.0
	수행건수	8건 이상 ~ 2건 미만	3.0 ~ 1.0
경영상태(6)	신용평가등급	아래 ② 참조	6.0 ~ 1.4
신인도(2)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없음 ~ 6개월 이상	2.0 ~ 0.0

[표2-1]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평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평점
A- 이상	2.0	A2- 이상	2.0	A- 이상	2.0
BBB+	1.9	A3+	1.9	BBB+	1.9
BBB°	1.8	A3°	1.8	BBB°	1.8
BBB-	1.7	A3-	1.7	BBB-	1.7
BB+, BB°	1.6	B+	1.6	BB+, BB°	1.6
BB-	1.5	B°	1.5	BB-	1.5
B+, B°, B-	1.4	B-	1.4	B+, B°, B-	1.4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1개 신용평가 결과만을 적용하여 다시 채점한 결과, 아래 [표3, 표3-1] 과 같이 우선협상 3순위 업체를 낙찰자를 잘못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표3] 항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 부적정 현황

구분	참가업체명	평 가 점 수 (재평가 점수)				우선 협상 순위	
		계	정량평가	정성평가	가격평가	당초	감사자 재산정
1	◆◆◆ 산학협력단	84.01 (80.41)	16.90 (13.30)	50.60	16.51	4	4
2	◇◇◇ 산학협력단	86.58 (82.58)	18.00 (14.00)	50.80	17.78	1	3
3	(주)▽ ▽▽▽	85.59 (82.79)	18.20 (15.40)	50.00	17.39	3	2
4	(주)▲▲ ▲▲▲	86.18 (82.98)	18.80 (15.60)	49.60	17.78	2	1
5	△△△△ △	80.70 (77.90)	16.70 (13.90)	44.00	20.00	5	5

[표3-1] 정량평가 중 『경영상태평가(신용평가등급)』 채점 부적정 내역

구분	참가업체명	부서 평가점수 (3개 기준 모두 반영)				적정 평가점수 (1개 기준 반영)	비고 (감점)
		계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1	◆◆◆ 산학협력단	5.4	1.8	1.8	1.8	1.8	- 3.6
2	◇◇◇ 산학협력단	6.0	2.0	2.0	2.0	2.0	- 4.0
3	(주)▽ ▽▽▽	4.2	1.4	1.4	1.4	1.4	- 2.8
4	(주)▲▲ ▲▲▲	4.8	1.6	1.6	1.6	1.6	- 3.2
5	△△△△ △	4.2	1.4	1.4	1.4	1.4	- 2.8

3.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의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 등)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다만, 서울특별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시·도의 위원으로만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의 제안서평가위원회('17.04.07.) 구성·운영에 있어 전국 시·군·구에 심사 요청하였으나 심사위원 신청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관련 예규에 따라 다른 시·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하지 않고 도내 위원들만으로 평가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게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현 ●●●과) 지방농업주사 ㉠㉠㉠은 2017.01.01.부터 2017.12.29.까지, ○○○○○○○○○과 지방시설서기 ◆◆◆은 2017. 01.01.부터 현재까지 ‘향노화의 중심 산삼골 함양 스토리텔링 개발용역’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 20】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 및 정산검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불우한 이웃 지원 일환으로 매년 8천만 원 ~ 1억 4천만 원 정도의 지방보조금을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회원수 350명. 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교부해 오고 있다.

[표1]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예산액임)	비고
계	436,138	112,738	85,200	95,200	143,000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180,000	45,000	30,000	30,000	75,000	
헌집 고치기 사업	142,938	30,938	31,000	41,000	40,000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20,600	5,600	5,000	5,000	5,000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업	10,000	2,500	2,500	2,500	2,500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30,000	7,500	7,500	7,500	7,500	
자원봉사협의회 창립18주년 기념식	8,000	8,000	-	-	-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 대회	24,000		8,000	8,000	8,000	
물레방아가족 자원봉사단 활동 지원	8,600	1,200	1,200	1,200	5,000	
자원봉사협의회 운영비 보조	12,000	12,000	-	-	-	

2. 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부적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¹⁾의

1)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자원봉사활동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며,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에서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인 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 매년 5백만원(사업명 :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3.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정함이 없이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군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의2 및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위 [표1] 과 같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등 9건의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는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정작 각 사업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과 조건²⁾을 정하지도 않은 채 매년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하여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을 관리하였다.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내지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또는 해당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전에 보조금 전용통장(계좌)에 자부담금을 예치한 통장사본 등 확인을 거쳐 교부하고,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을 한 후에 반환조치토록 되어 있다.

- 따라서 함양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2) (예시)사랑의 집 지어주기사업 : 집 건축(수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에 사용하고, 수리 용역 및 인건비는 보조사업자가 무료 제공, 지원대상은 장애인 가정, 독거노인, 사실상 어려운 가정 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혜자 제외)

내용이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을 완료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함양군(●●과)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서)에 자원봉사 회원들의 직접활동사진 누락, 보조금 자부담분 미예치, 자부담분 지출 증빙서류 미첨부 등 아래 [표2] 와 같이 적정하지 못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 아무런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증빙자료가 적정하다고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보조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2]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부적정 내역
계	277,538	99,538	84,000	94,000	공통 : 보조금의 내용과 조건을 정함이 없이 협의회의 보조금 신청서에 따라 사업 추진
사랑의 집 지어주기 사업	105,000	45,000	30,000	30,000	- 준공기념촬영, 현장 방문 외 회원들의 직접 봉사 활동사진 없음 - 건축자재비 외 시공 부분 증빙자료 없음
현집 고치기 사업	102,938	30,938	31,000	41,000	- 회원들의 직접 봉사활동 여부 확인 곤란 (증빙사진 다수 누락)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15,600	5,600	5,000	5,000	- 운영비로 집행(지방 재정법 제32조의2 위반)
독거노인 효도관광 사업	7,500	2,500	2,500	2,500	- 지원 비대상사업(지방 재정법 제32조의2 위반)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업	22,500	7,500	7,500	7,500	- 간이영수증 첨부(결제 증빙자료 없음)
자원봉사협의회 창립18주년 기념식	8,000	8,000			- 자부담분 예치 여부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
자원봉사협의회 한마음 대회	16,000		8,000	8,000	- 자부담분 예치 여부 확인 없이 보조금 지급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 지방행정주사보 ○○○은 2018.01.01.부터 현재까지, ●●과(현 ●●면) 지방행정서기 ㉠㉠㉠은 2017.01.01.부터 2017.12.31.까지, ●●과(현 경상남도 ㉠㉠㉠㉠관) 지방행정서기 ㉠㉠㉠은 2016.01.11.부터 2016.12.31.까지, ●●과(현 ㉠㉠㉠㉠과) 지방행정주사 ㉠㉠㉠은 2014.06.12.부터 2016.01.10.까지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 지원사업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일련번호 : 2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 등 농산물유통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협동조합 (이하 “◆◆농협”이라 한다)을 보조사업자로 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하는데 3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후 2017년 정산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2016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현황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내역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2016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16.2.~’17.7.)	◆◆◆◆ 협동조합	감리 및 컨설팅, 토목공사, 전기, 소방, 통신, 건축(일반), 설비(저온), 장비류(선별포장, 유통시설)	5,500	3,300 (국 1,650, 도 494, 군 1,156)	2,200	

2. 지방보조금 정산업무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2조의4 내지 제32조의6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또는 해당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며,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또한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 내지 제23조, 제26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자에 대해 그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한편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자가 아니면 전기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므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제8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함양군(●●●●●과)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사업실적 보고서의 내용이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산을 완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러나 함양군(●●●●●과)에서는 2016.02.24. ◆◆농협에 농산물 산지유통 센터(APC) 건립 용도로 3,300백만원을 교부하면서 법령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교부결정하고서도 이후 ◆◆농협에서 제출한 정산서류 중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17. 02.01.~'17.07.22., 274,582천원, (주)◆◆◆◆감리)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건립 사업 소방공사('17.02.01.~'17.07.22., 134,860천원, (주)●●전기)'의 사진대장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이어서 불법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 확인 후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전기 및 소방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상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안전화 등 6종 9,843천원) 구입일자가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은 '17. 07.01.이고, 구입처가 아웃도어 전문매장인 ☒☒함양점이며 안전화의 가격이 시중가격(4만원~8만원 정도)보다 비싼 165천원에 구입하였는데, 이를 확인하여 부적정한 지출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를 정산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였고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도 적정하다고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게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 지방농업주사 ○○○은 2014.07.01.부터 현재까지 농산물 산지유통시설(APC) 건립 보조금 지원 사업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 · 훈계 및 주의요구

제 목 동일구조물 분할계약 및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과, ○○○○○○과, ★★★★★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 ◆◆◆◆과에서는 ○○과에 동일구조물이 교량을 교대, 교각공사는 일반건설공사로 발주하고, 상판(거더)는 물품(관급자재) 제조 및 설치로 분할 계약 의뢰하였으며, ○○과에서는 이에 대한 통합발주 의견 등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6년 도 감사관실 시행 한 「건설사업 재정절감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분야 특정감사」시 특허에 대한 대체·대용품에 대하여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유사 특허를 검토하여 적절하게 계약토록 함양군에 지적하였으나,
- 함양군에서는 기존 방식대로 대체·대용품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달청에 요청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동일 구조물공사 분할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나. 특허를 근거로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사목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특허를 받은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적절한 대용·대체품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함양군 과 등에서 특허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과

에서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였으나, 조달청에서는 특허에 대한 대체대
용품 검토를 함양군에 요구하였다,

- 그러나 사업부서인 ◆◆◆◆과에서는 특허청 유사특허를 조회하면 쉽
게 확인 가능한 대체 특허 유무를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회신하여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않았
으며,
- 특히, 도 감사관실에서 '16.1.25.~2.18. 시행한 「건설사업 재정절감 및 청렴
도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분야 특정감사」 시 “특허 반영 물품 구매계약 부
적정”으로 특허에 의한 관급자재 수의계약 시에는 특허청 유사특허를 조
회하여 적절히 대체할 수 있는 특허 유무 검토 후 법령에 맞도록 계약하
라고 지적하고, 당시에 담당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금회에 한하여 주
의조치 하였으나,
- 이후에도 특허에 따른 7건, 3,377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면서 기존업
무 처리방식 그대로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 단일사업에 대하여 분할발주 계약 체결하고, 특허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
면서 대체 특허에 대한 최종 검토를 소홀히 처리한 여득분은 「지방공무원
법」 제 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 ◆◆◆◆과, ○○○○○○○과,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2. ○○과 지방행정주사보 ※※※은 2017.1.1.부터 현재까지 ○○과에서
계약업무관련 실무담당자로서 ◆◆◆◆재가설공사 외 1건의 분할발주와 ◆◆◆
◆ 정비사업 외 5건의 대체특허 유무 검토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처분(징계),
3. ○○과(현 ◆◆과) 지방행정주사 ■■■■은 2016.1.1.부터 2017.6.30.까지
재무과에서 계약업무관련 실무책임자로서 ◆◆◆◆재가설공사 외 2건의 분
할발주와 ◆◆◆◆ 정비사업 외 4건의 계약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
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훈계),

4. ○○과(현 ☼☼☼☼과) 지방서기관 ♥♥♥, ◆◆◆과 지방시설사무관 ◆◆◆는 도 감사관실에서 ‘16.1.25.~2.18. 시행한 「건설사업 재정절감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건설자재 분야 특정감사」 시 “특허 반영 물품 구매계약 부적정”에 대하여 확인서 날인까지 하고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고 감독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5.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및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 ○○과에서는 본청 소속 부서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요청 시 관련 법령에 적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요청에 대하여 변경 계약의 적정성 검토 없이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과에서는 함양군 관내 산림 정책을 수행하면서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요청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고,
 - 같은 항 제8호에는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목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 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제23조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산림병해충·산사태·산불 등 재해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
2.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산림자원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또는 벌채 사업
2. 50헥타르 이상의 속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

나. 1인 전적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 1)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규정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 감독자는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V-4-다-1)에서는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 등의 업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리(감독)원의 업무범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1. 시공계획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서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VI-1-가.에서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로 다음 4가지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동 예규 VI-5-가. 에서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는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당해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신규 공종의 추가사유로 설계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별도 신규공사로 발주하여야 한다.
- 또한,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2-가 에서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회계관계직원의 의무)에서는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업(공사)의 설계변경은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제6절-1-나-1)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사업)에 대하여는 시공도중 공사비를 증액 정산하거나 설계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1)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현황

사업명	사업량 (ha)	도금액 (천원)	사업기간	위법·부당	비고
합계	3건	159,531			
2016년■■■■사업 (제2권역 수동우명3지구)	43.81	68,311	16.03.25. ~16.04.23	50ha이상 대하여 대행이나 시행할 수 50ha미만 수의계약	사업에 과 위탁하여 있음에도 사업을 함양군 과 수의계약
2016년■■■■사업 (제2권역 수동우명2시범지구)	39.46	68,461	16.03.25. ~16.04.23		
2016년■■■■사업 (제2권역 남효내백지구)	34.9	22,759	16.03.25. ~16.05.13		

(자료 : 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2) 함양군 ♥♥♥♥과에서는 위 “1인 견적 수의계약 부적정현황”과 같이 ‘16년에 총 3건, 159,531천 원의 사업은 50헥타르 미만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으로 함양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근거가 없음에도 「산림자원법」 제23조 제1항을 근거로 재무과에 1인 수의계약을 요청하고, ○○과에서는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과 요청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나. 특허를 근거로 관급자재 수의계약 부적정

1) 1인 수의계약 설계변경 부적정 현황

(단위:천원)

회계연도	공사명	도급자 (상호명)	계약일자	당초 계약금	변경 계약금	증감	비고
	계	6건		102,540	127,906	26,359	
2015	2015년●●●●주정차교통표지판정비사업	(주)●●●●●	2015-06-05	16,400	17,750	1,350	●●●●●과
	2015년◆◆◆◆도로교통안전시설설치사업	◇◇◇◇◇주식회사	2015-09-21	19,700	27,067	7,650	●●●●●과
	함양읍내노상주차안내표지판정비사업	(주)●●●●●	2015-10-06	16,700	18,450	1,750	●●●●●과
	◁◁◁◁시설설치사업(1공구)	◀◀◀◀건설주식회사	2015-10-06	17,600	21,349	4,059	●●●●●과
2017	▲▲▲▲▲개보수사업전기공사	◇◇◇◇◇주식회사	2017-09-13	17,740	25,190	7,850	○○○○○과
	■■■■■센터및관리사무소보완사업	주식회사■■■■■	2017-11-21	14,400	18,100	3,700	○○○○○과

(자료 : 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 2) 함양군 ●●●●과 등 1개 과에서는 위 “1인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현황”과 같이 ‘15년부터 ’17년까지 6건의 사업을 도급액이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나, 이는 산출내역서가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아 설계변경 대상이 아님에도 ○○과에서는 면밀한 검토없이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과,●●●●과,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2. ○○과(현 ○○○○과) 지방행정주사 ㄹㄹㄹ은 2014.7.1.부터 2016.12.31.까지 ○○과 계약업무 실무담당자로서 계약업무를 수행하면서 1인 수의계약 부적정 3건, 설계변경 부적정 4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훈계),
3. ♥♥♥♥과(현 ■■■■과) 지방녹지주사보 ㄹㄹㄹ은 2016. 1. 11.부터 2017. 12. 31.까지 ♥♥♥♥과에서 □□□□ 사업 실무담당자로서 1인 견적 수의계약 조건 부적합 사업 3건을 재무과에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결과적으로 부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
4.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 · 훈계 및 주의요구

제 목 ◆◆◆◆◆◆◆◆ 진입로 정비사업 공사시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사무소)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가. 함양군 ○○○○과에서는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며,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제고를 위하여 귀농·귀촌 유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 함양군의 인구증가를 위해 ○○○과에서는 귀농·귀촌인 집단주거지역 대
상지를 선정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부서(◆◆◆◆사업소, ●●●●과)에 지원을 요청하고,
●●●●과에서는 진입로에 대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라. ◆◆◆ “◆◆◆◆◆◆◆◆◆◆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사무소에 40,000천 원을 재배정하여 백전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나.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 가. 함양군 ○○○과에서는 “귀농·귀촌 집단주거지역 대상지 지원계획 수립” 시 “◆◆◆◆◆◆◆◆◆◆ 진입로 정비사업”을 선정하면서 실제 개인 1인 소유 임야를 토지분양 30가구, 미분양 50가구로 집단주거지역인(80가구)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다수의 귀농·귀촌인이 혜택을 받는 이유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다.
- 나.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함양군 ○○○과에서 집단주거지역 대상지 지원계획 방침대로 “대피소 10개소” 설치사업비(40,000천 원)을 백전면 재배정하였으나,
- 다. ◆◆◆사무소에서는 당초사업 목적과 다르게 개인 사유지 내 도로공사(콘크리트 포장 L=300.0m)를 산지관리법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대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 예산 40,000천 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소유 임야에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가 가능하게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 라. 임야소유자 ◀◀◀는 도로공사 준공(2017. 7. 14.) 이후 10필지를 22개 필지로 분할하고, 5필지에 단독주택을 신청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없이 1인 소유 임야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소홀히 예산을 집행한 ◀◀◀은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 ○○○과, ◇◇◇◇◇과,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하시기 바라며,(주의)
2. ◆◆◆사무소(현 ○○○과) 지방시설주사보 ◀◀◀은 2017.1.1.부터 2017.12.31.까지 사업시행 관련 실무담당자로서 임의대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관련법규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없이 1인 소유 임야에 도로를 설치하는 등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않고 소홀히 집행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경징계』 처분(징계)
3. ○○○과 지방농업주사 ○○○은 2016.1.11.부터 현재까지 귀농귀촌 지원사업 관련 실무책임자이며, ◆◆◆◆◆ 대상지 선정 시에는 업무

담당자로서 읍면에서 제출된 분양정보와 다르게 분양 정보를 작성하여 대상지가 적정하게 선정된 것처럼 방침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훈계)

4. ◆◆◆사무소(현 ◇◇◇◇실) 지방행정주사 ㉠㉠㉠은 2016.1.11.부터 2017.6.30.까지 사업시행 관련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훈계)
5. 아울러,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직원에게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2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조성사업은 함양군(☆☆☆☆과)이 2017. 6. 23. ♣♣시 소재 ♥♥건설(주) 대표이사 ○○○과 349,175천 원에 계약하고, 2017. 6. 28. 착공하여 2017. 12. 19. 준공한 사업이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실시계획 미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면 지상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8조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2017. 6. 12. @@@@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부지가 2016. 5. 26.(최종 변경결정) ♣♣광장(A=39,790m²)으로 결정된 군계획시설로서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인가 없이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나. 공원구역 저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의하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은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업으로 ♡♡광장인 ♥♥광장을 조성하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하여 ♣♣공원구역 안에 녹지로 결정(2017. 7. 27. 최종 변경결정)되어 있는 공원 부지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없이 무단으로 광장(3,210㎡)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

다.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계석 설치에 따른 거푸집 219㎡ 시공하여야 하나 109.5㎡만 시공하여 공사비 3,701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고,

또한, 조경석 쌓기 수량산출서에 높이와 폭을 잘못 산정하여 46.07톤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64.55톤으로 과다 적용하여 공사비 2,866천 원 과다 계상하는 등 위 도합 공사비 6,567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 ①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 미인가와 이로 인한 공원조성계획 저촉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와 실무책임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공원구역 및 공원조성계획을 현실에 맞게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변경결정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6,567천 원 상당액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번호 : 2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조성공사는 함양군(☆☆☆☆과)이 2016. 6. 1. ♣♣시 소재 (주)♡♡건설 대표이사 ○○○와 330,813천 원에 계약하고, 2016. 6. 7. 착공하여 2017. 6. 7. 준공한 사업이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착공 및 준공 통보 미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별표 4에 의하면 사업 계획 면적이 보전관리지역 5,000m² 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와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2016. 5. 9. @@@@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업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고 개발사업 면적이 24,871m²으로 2016. 4. 7.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협의내용에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공사 착공 및 준공 통보를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나.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 1. 26. 결정된 ♠♠천 하천기본계획 및 하천구역 고시내용을 보면 위 사업의 @@@@ 조성부지 중 함양읍 ○○리 ###-###지번 등은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고,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에 맞춰 ♥♥제를 축제(L=271m)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위와 같이 @@@@ 조성부지 일부가 하천구역에 저촉되어 함양군 ☆☆☆☆과에서 2016. 2. 5.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통보하면서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번의 면적을 신청면적에서 제외하여 사용허가를 하였음에도, 하천구역을 제척하지 아니하고 당초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계획대로 부지를 조성하여 하천구역 A=3,210㎡가 저촉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다. 공사감독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류지 침사지 조성에 톤마대 쌓기를 588㎡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539㎡만 설치하여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2,963천 원 상당액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

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
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준공통보 등 환경청과 조속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지방하천인 ♡♡천 하천기본계획에 저촉되는 부분은 현재 부산지방국
토관리청에서 ♡♡♡♡권역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에 있으므로 귀 군
의 하천부서, 하천관리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조속히 협의하여 현지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④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침사지 톤마대 쌓기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2,963천 원 상당액은 관련 규정 등에 따
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번호 :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 정비사업 감독 및 준공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정비사업은 함양군(☆☆☆☆과)이 2014. 4. 1. ♣♣시 소재 ♥♥건설 (주) 대표이사 ○○○와 2,940,112천 원에 계약하고, 2014. 4. 8. 착공하여 2017. 4. 14. 준공한 사업이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와 제17조(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감독 및 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과)에서는 2014. 3. 14. @@@@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수로 박스, U형수로, J형수로 등에 강관비계를 2,388㎡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수로 높이가 2m로서 현장에서는 비계를 일부만(1,101m²) 설치하였고, 신축이음을 15~20m 간격으로 전체 42개소를 설치하여야 하나 설치간격을 넓려 총 28개소만 축소 설치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사감독자는 수로구간 철근배근에 따른 검측을 하면서 강관비계 및 신축이음이 설계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에 따라 시공하는지 등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 33,374천 원 감액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가시설물은 목적물 시공을 위해 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하고 철거되는 시설물으로써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수로 설치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의 버팀대 및 띠장설치를 설계도면(3m 간격)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19,085천 원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가설도로 개설에 따른 부지임대료는 실제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정산(공사비 1,386천 원)하지 아니하였고, L형 측구 시공에 따른 거푸집 56m²(공사비 1,507천 원)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임시가도 구간에 줄떼 1,842m² 및 느티나무 113주(공사비 39,765천 원)를 미식제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한 사실이 있다.

나. 품질시험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미이행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총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에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수립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품질시험계획(토공·보조기층·아스팔트 등 선정 및 관리시험)에 따른 품질시험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설계에 계상된 시험비(공사비 2,189천 원)를 과다

지급하여 위 도합 공사비 97,306천 원 상당액을 설계변경 없이 과다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공사감독자로서 감독업무를 태만히 한 실무담당자 ‘갑’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되지도 않은 일부 공종(가시설, 신축이음, 줄떼 및 느티나무 식재) 등에 대한 설계변경 미시행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갑’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징계)

② 설계도서대로의 시공여부 확인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을’ 및 준공검사자 ‘병’, 실무담당자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정’ 및 감독책임자 ‘무’에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③ 또한 부실시공(설계도서대로 미시공)으로 줄떼 및 느티나무 식재 재시공이 필요하고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을 미이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게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④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하여 강관비계, 신축이음 및 흠막이 가시설 등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57,541천 원 상당액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줄떼 및 느티나무 미식제된 도합 공사비 39,765천 원 상당액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맞도록 사업범위 내에서 조속히 재시공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번호 : 2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권고요구

제 목 @@@@ 제작설치공사 안전관리 소홀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제작설치공사(1차)는 함양군(☆☆☆☆과)이 2014. 4. 28. ♣♣시 소재 ♡♡♡♡(주) 대표이사 ○○○과 2,788백만 원에 계약하고, 2014. 4. 30. 착공하여 2017. 8. 4. 준공한 사업이며,

@@@@ 제작설치공사(2차)는 함양군(☆☆☆☆과)이 2017. 6. 28. ♣♣시 소재 ♡♡♡♡(주) 대표이사 ○○○과 4,069백만 원에 계약하고, 2017. 7. 26. 착공하여 2019. 2. 18. 준공예정인 사업이다.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궤도시설 설치관련

「궤도운송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시에는 궤도시설이 같은 법 제19조제2항의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건설회사, 궤도차량 제작사 등이 제공하는 주요 부품의 시험성적서, 취급·유지·보수매뉴얼, 설치도면 등의 자료를 갖춰두고 있어야 하고,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궤도사업자는 운송 중 기계의 결함·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궤도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거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궤도시설의 안전관리계획 및 자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궤도차량 밖으로 이용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함양군(☆☆☆☆과)에서는 @@@@ 제작설치공사 1차분 L=1.97km 공사가 준공되었고, 2차분 L=1.98km 공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분 준공에 따른 ♠♠공단의 안전검사 결과의 최초검사 결과의견에 따르면 감속비, 피니언³⁾ PC D⁴⁾, 레일규격, 브레이크용량 및 차량중량 등이 설계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차량이 정류장 외에 선로에 정지된 경우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차량 내 하차 장치 및 보도설치 구간은 지면에서 1m 이상인 구간으로 지면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 계단 등 시설물 보완,

비상 시 선로에 정차할 경우 통제실에서 차량 위치파악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할 수 있는 안내간판 및 비상탈출 통로와 모노레일 선로가 임도 및 등산로를 횡단하는 구간에는 차량 충돌방지 시설 및 등산객 접근금지 시설 설치,

일부 구간 모노레일 선로 주변 차량과 간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수목제거 및 철쭉나무 가지치기가 필요하고, 하부정류장과 차고지간 작업자 및 관리자 연결동선 미계획으로 안전사고 우려,

CCTV가 현재 11대 설치되어 있으나, 통신선로불량 등으로 관제실 모니터에 4개소가 화면연결이 되지 않아 즉시 조치가 필요,

3) 맞물리는 크고 작은 2개의 기어 중에서 작은 쪽 기어를 말하거나 랙(rack : 곧은 막대에 직선상으로 이를 낸 것)와 맞물리는 기어를 말한다.

4) 휠 홀의 지름으로 mm로 표시

1호 차량 시운전 등에 따른 차체 바닥부 일부 훼손이 발생하였고, 선로 상단부 레일·거더·체결볼트 등에 도장 벗겨짐 및 녹 발생, 온도변화에 따른 트로리 정렬 미흡 등 모노레일 시설물 일체 정비가 필요한 사실이 있다.

나. 궤도시설 운영관련

@@@@ 제작설치공사 1차분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건설회사 및 궤도차량 제작사가 제공하는 취급·유지·보수매뉴얼 등의 자료를 미비취하였고,

산악지역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모노레일 이용객 대피시설을 상부정류장에도 설치검토가 필요하며, 상·하부 정류장 고저차로 모노레일 정상부 낙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차량운행을 신속히 파악·전달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도입검토가 필요하고,

모노레일 이용객은 입구 주차장에 하차하고 셔틀차량을 이용하여 하부정류장까지 이동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최대 이용객 추정결과(월 2만명 정도)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주차장, 셔틀차량 및 보도동선 등 운영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실이 있다.

다. 예산집행관련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각각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 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허용 항목에 한하여 사용하고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 제작설치공사(1차분)를 준공하면서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를 허용 항목 외에 사용하였음에도 정산하지 아니하여 공사비 22,783천 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함양군수는

① ‘@@@@ 제작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정비·보완하고,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매뉴얼 작성 비취, 통합관제시스템 도입 검토 및 교통대책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시정 및 권고를 요구하오니, 모노레일 운영 개시일 전까지 시정·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권고)

②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미정산으로 인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도합 공사비 22,783천 원 상당액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회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③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 연찬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00과, **과)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업무개요

☒☒군(00과, **과)에서는 ♣♣도로 확포장공사(지방도 00호선)등 4건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공사 시행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착수 사실을 5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조서·설계도서와 비용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 00과에서는 지방도 00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 하면서 도로관리청인 ****의 허가 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로구역(변경)결정사항이 고시되지 못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도 고시되지 못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며, 편입부지에 대한 소유권도 도로관리청이 아닌 ☒☒군으로 이전등기 하였다.

또한, 00과 및 **과에서는 ##지구 신규마을 교차로개선사업(위임국도 @@호선) 등

3건의 사업을 공사발주 후에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득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의견반영을 위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요인과 추가예산이 수반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 생태하천조성 &&교 재가설공사는 공사가 준공되었음에도 도로관리청에 준공확인을 받지 않고 방치하여 준공시설물이 도로관리청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도로 유지관리에 혼선 초래하는 등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를 적절하지 않게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도로법」 제36조를 위반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00과 전 실무담당자 지방★★@급 ■■■(현 00과)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②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 없이 현재 시행중인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는 조속히 도로관리청의 시행허가를 득하시기 바라며, ☐☐군으로 소유권이전한 편입부지는 도로관리청인 ****로 이전등기 하시고, 해당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않고 있는 「☐☐** 생태하천조성 &&교 재가설공사」는 조속히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 준공시설물이 이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③ 아울러,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 검수소홀

소 관 기 관 ☐☐군(00과)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업무개요

☐☐군 00과에서 추진한 ○○~◆◆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5. 5.15. &&군 소재 (주)**건설(대표 @@@)과 164,594천원에 계약 체결 하여 2016. 6.14. 준공한 용역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은 관련규정에 준하여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 공사시행 전반을 검토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선정 등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른 용역감독자는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예정공정표,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하고,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 계약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용역준공 전에 미리 시정 조치하는 등 용역 과업이 적합하게 수행되도록 용역과정을 면밀히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시행령 제 64조, 시행규칙 제65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를 할 때는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의견을 검사조서에 적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 국토해양부(2012. 8.)」에 따라 노상의 동결방지를 위한 동상방지층은 동결피해가 없는 2m 이상의 성토구간에서는 시공을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구간에 대한 동상방지층 설치여부는 최대동결깊이를 산정하여 설계 동결깊이가 포장두께보다 큰 경우 그 차이만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군] 00과에서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용역업자가 납품 한 설계도서의 포장단면이 설계도면(포장두께 81cm)과 예산(물량)내역서(포장두께 50cm)상 포장두께가 서로 상이하여 실제 현장 시공 시 공사수행이 곤란하도록 설계도서 간 불일치하게 설계도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시정·보완요구 없이 준공처리하였으며,

도로 동상방지층 반영을 위한 동결심도 계산 시 기초 자료 값을 2012년 국토해양부에서 제정한 「도로동상방지층 설계지침」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1970~2001년) 기상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필요하지도 않은 동상방지층을 반영하여 공사비 약 407백만원이 과다 설계되는 비경제적인 설계도서를 납품받아 용역을 준공처리하는 등 실시설계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00과 전 실무담당자 지방★★@급 [현] 00사업소)에게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처분하시기 바라며, (훈계)
- ② 설계도서간 서로 일치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설계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실시설계용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 등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③ 아울러, 설계도서간 서로 일치하지 않아 공사수행이 곤란하고 설계기준 적용 오류로 필요하지 않은 동상방지층 반영으로 407,500천원 상당이 과다하게 계상된 납품 설계도서는 전면 보완 설계하여 감액한 후 사업발주 하시기 바라며,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 · 훈계 · 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군 ○○광역마을상수도(@@지구)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00사업소)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업무개요

☐☐군 00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 ○○마을상수도(@@지구)설치사업은 2017. 5.29. ##시 소재 &&토건(주)(대표 ***)와 2,501백만 원에 계약체결하고 2019.12.31.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는 관할 구역에 대한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관리계획을 입안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효력은 같은법 제31조(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 등), 시행규칙 제31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 확인)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 1명 이상을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

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 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도 [가]군 00사업소에서는 [가]군 ●●마을상수도(@@지구)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상수도 취·정수시설은 기반시설에 해당됨에도 사업시행 전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현실지형과 지형도면이 불일치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하였으며,

상기 공사의 현장관리를 위한 현장대리인을 선임(변경)하면서 근무경력이 부족하여 공사에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건설기술자가 선임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됨에도 교체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는 등 현장관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가]군 ●●마을상수도(@@지구)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분 상수관로 L=2.4km 시공분에 대한 수압시험을 시방기준(200m/회)에 미달되게 계획(6회) 하였으며, 계획된 6회의 수압시험(실시 2회, 미 실시 4회)도 동일 장소에서 사진 촬영 각도만 다르게 촬영하여 정상적으로 실시한 것처럼 시공사에서 보고하였음에도 2017. 9.29. 출장결과보고 하면서 2017. 9.14. ~ 9.29.까지 실시한 총 6회의 수압시험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수압시험에 대한 관리감독 등 현장전반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였으며,

공사내역에 반영되어 있는 시공상세도를 제작·제출하지도 않았음에도 확인 없이 부당하게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약 22,150천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는 등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징계요구 양정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게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00사업소 전 실무담당자 지방★★@급 [가]군(현 00면)의 행위는 「지방공무원

법」 제48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게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00사업소 전 실무담당자 지방★★@급 ▣▣▣(현 00면)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처분하시기 바라며, **(징계)**
- ②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게 실시하는 등 공사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00사업소 현 실무책임자 지방★★#급 ▣▣▣에게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수압시험을 부적절하고 부족하게 시행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부실벌점”부과 및 “고발”조치하시기 바라며, **(통보)**
- ④ 1차 시공분에 대해 지방기준에 미달되고 부적절하게 실시한 수압시험에 대하여 본 공사 지방기준에 따라 전면 재시험하여 시험결과에 따라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 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부합되지 않게 배치된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변경 교체하시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미 이행한 행정절차는 조속히 이행하여 지형도면과 함께 그 내용이 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시정)**
- ⑥ 시공사에서 제작·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지출된 시공상세도 작성비 약 22,150천원 상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건설공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징계 ·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 신설 승인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에서는 2015. 4. 20. @@@@이 함양군 유림면 손곡리 ####번지(공장설립승인지역 제1호 지역)에 신청한 공장 신설 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 설립 조건(오수 발생량 10m³/일 미만 시설 승인 가능) 검토를 소홀히 하여 오수 발생량 12m³/일인 공장을 부적정하게 승인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제1항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1)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7조의2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중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 제1호 지역)에서는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에 대하여 승인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함양군에서는 공장설립승인지역 제1호 지역에 @@@@이 승인 신청한 공장의 오수 발생량은 12m³/일으로 공장 승인 조건인 오수 발생량 10m³/일 미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장 신설 승인이 불가함에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부적정 하게 공장 신설 승인을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① 함양군수는 위와 같이 수도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 설립 요건인 오수 발생량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장 신설 승인을 부적정 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행정@급 ***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징계)
- ② 또한 실무책임자로서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행정5급 ***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수도법」을 위반하여 승인 된 @@@@ 공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적합하게 오수 발생량 10m³/일 미만인 되도록 변경 승인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 @@@@@ 및 @@@@ 조성 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은 남해군 소재 %%%%%%%%%의 4개사와 2016. 12. 29. 7,826백만원에 계약하고, 2017. 1. 4. 착공하여 2018. 5. 25. 준공 예정으로 @@@ @@@@@ 및 @@@@ 조성사업(부지면적10,235㎡,연면적2,748.61㎡)을 추진 중임.

2. 관계법령 및 판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관리계획 수립·변경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기능)에 따라 공유재산 심의회는 대장가액 3천만원 초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건축사법」 제4조 제1항에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제23조 제1항(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또는 제8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가. 공유재산 취득 절차 미이행

- 함양군은 ‘@@@ @@@@ 및 @@@@ 조성사업’은 공사비가 7,826백만원으로 2015년 예산편성 전 2014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공유재

산 심의회 심의를 득하여야 함에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공유재산 취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나. 실시설계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 ‘@@@@@ 및 @@@@정비사업’은 주공정이 건축물(유통센터 1,236㎡)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허가에 해당되어 #####는 건축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설계 등을 할 수 없어 수의계약 대상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와 실시설계용역(100백만원)을 수의계약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 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다. 공사관리 부적정

- 함양군에서는 터파기 장비 변경, 경계석 거푸집 미시공, 타일붙임 시공 공법 변경 등 공사비 16,462천원에 대하여 실제 시공과 같이 설계변경(실정보고)을 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함양군수는 위의 “가, 나”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수의계약 자격이 없는 #####와 부적정 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 실무담당자 행정6급 ***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또한 위의 “가, 나”와 같이 실무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그리하지 아니하고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행정@급 ***은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③ 아울러 함양군에서는 ‘@@@ @@@@@@ 및 @@@@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터파기 장비 변경, 경계석 거푸집 미시공, 타일붙임 시공 공법 변경 등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 및 과다 계상된 공사비 16,462천원 상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설계변경 하여 감액 조치하시고,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산지관리법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건축용도변경 처리
소 관 기 관 함양군(&&&&)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 @@@가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번지에 신청한 건축물 용도변경허가 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대상임에도 승인 절차 없이 부적정 하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허가 하였다.

○ 허가 현황

구분	대지위치	건축주	용도지역	대지면적(㎡)	연면적(㎡)	용도변경 현황(㎡)		건축(용도변경) 허가일	기존 사용 승인일	비고
						변경전	변경후			
용도 변경	안의면 하원리 #####-#	@@@	생산 관리지역	1,157	108.98	단독주택 : 70.54 소매점 : 57.82	야영장시설 : 108.98 철거 : 19.38	'16.12.19.	'14.7.23.	

2. 관계법령(판단기준)

○ 「산지관리법」 제21조(용도변경의 승인)에 의하면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한 자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 목적사용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 함양군에서는 2016. 11. 14. 함양군 안의면 하원리 #####-#번지에 @@@가 단독주택 및 소매점을 야영장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은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대상임에도,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협의)없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임의로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 ① 함양군수는 위와 같이 산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없이 건축물 용도변경 처리를 한 실무담당자 시설@급 ***에게는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 ② 아울러 담당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와 규정에 대한 연찬과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요구

제 목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에서 추진중인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2015. 6. 17. &&시 소재 (주)**건설 대표이사 @@@과 2,603천 원에 계약하고, 2015. 6. 25. 착공하여 2018. 5. 26. 준공예정인 사업임.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지방하천 점용허가 미실시

「하천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에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에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1항에 법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천점용허가신청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지방하천의 하천구역 내에서 공원시설 설치 등을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적합여부, 공작물 설치로 인한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위해 하천관리청 협의와 하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하천구역에 이와 관련한 검토 및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성될 공원이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하게 되어 여름철 홍수시 시설물 침수 등으로 인해 재산피해가 우려되며, 추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제방 축제시 금회 설치한 황토포장이 철거 되는 등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함.

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절차 누락

「농어촌정비법」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제54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계획, 제58조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제101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계획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시행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세우거나 이를 승인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1조(생활환경정비법 시행계획의 변경)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제59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군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변경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고시 및 일반인에게 열람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없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다. 사업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

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반영된 자연석 쌓기 품에 대하여 ‘조경공사 적산기준’ 제11장(조경석)에 따라 자연석의 체적 계산시 70%의 실제적률을 적용하고, 별도의 할증은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내역에는 자연석이 할증(10%)반영 및 공극률 오적용으로 물량이 과다 반영되어 있으며, L형측구 설치공에 대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거푸집 없이 시공하였으며,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미끄럼방지포장 편)’ 3(설치장소)에 따라 신설도로는 노면하자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별도의 미끄럼방지포장은 설치하지 않아야 하나 신설도로(소로)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 없이 미끄럼방지포장을 반영하는 등 도합 33,630천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위와 같이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미이행, 행정절차 누락, 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시설@급 &&&, 시설*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를 요구하며,(훈계)
- ② 부적정하게 설계반영된 L형측구 거푸집 미설치 등의 공사비 33,630천원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하천구역 내 공원조성에 대해 하천관리청 협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사업 추진시 당초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에서 변경하여 시행한 부분에 대해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오니, 업무 연
찬, 교육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번호 : 36】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통보

제 목 △△동 주차장 조성사업 업무추진 부적정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에서 추진중인 △△동 주차장 조성사업은 2016. 6. 21. **시 소재 %%건설(주) 대표 @@@와 386백만원에 계약하였고, 2016. 6. 27. 착공하여 2017.12.14. 준공한 사업임.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가. 품질시험계획 부적정 및 품질관리자 미선임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품질관리계획수립 대상공사) 제1항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는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제3항에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

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업자는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품질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를 승인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과)에서는 사업 추진시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품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공사 시행 및 준공 하는 등 공사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다.

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1항에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2호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 제3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제2항에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 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1(순환골재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아호에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 시 보조기층 등의 사용량의 40%이상을 순환골재 의무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시 순환골재 의무사용에 대하여 검토후 설계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함이 경제적이지 못하거나 공급 곤란 등의 경우에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

의를 받아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토없이 설계반영 하지 않았으며, 사업에 반영할 경우 약 8,418천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순환골재를 반영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다. 공사 준공 등 사업추진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과)에서는 하수관로 설치에 대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14(하수관거 설계시 일반 및 유의사항) 사. 규정에 따라 관로검사를 위해 반영된 CC-TV 촬영 및 수밀시험을 공사 준공전 시험을 실시하여 관로의 시공 적정성 여부 판단 후 준공처리 함이 타당하나, 설계반영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 및 시공성 검증 없이 준공처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단가로 반영된 경계석 설치공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다르게 거푸집을 미설치하여 시공하였으며, 공사시 사토거리에 대해 실정산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지 않는 등 도합 2,649천원이 과다 지출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① 위와 같이 ‘△△동 주차장 조성사업’와 관련하여 품질관리자 미선임,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공사감독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무담당자 시설@급 %%%, 시설#급 @@@에게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

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를 요구하며,(훈계)

②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부실사항에 대하여 건설업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통보)

③ 하수관로의 적정 여부 판단을 위해 반영된 관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데 대하여는 설계내역에 반영된 시험(CC-TV 촬영, 수밀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경계석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등에 과다 지출된 공사비 2,649천원 상당에 대하여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 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하오니, 업무 연찬, 교육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등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번호 : 3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시정·권고요구

제 목 △△ 하천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

소 관 기 관 %%군(**과)

조 치 기 관 %%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군 **과에서 추진중인 △△하천조성사업은 2010. 12. 17. &&시 소재 &&건설(주) 대표 @@@ 외 1과 11,290백만원에 계약하여 2010. 12. 22. 착공하여 2018. 12. 31. 준공 예정임.

2. 관련법령 및 위법·부당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시방서·산출내역서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군(**과)에서는 본 사업시 조성한 축제 뚝마루에 반영된 실개천에 대하여 기 설치된 구간이 낙엽, 쓰레기, 물이끼 등으로 인해 유지관리에 애로점이 많으며, 주변 여건상 실개천이 주민들의 발담그기, 휴식 등 당초 설치 목적 달성이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실개천 조성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나머지 구간의 시공비 821,181천원 제외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함이 타당하며,

또한, 설계반영된 조립식간이흙막이에 대하여 실제 시공시 설계내역에 반영된 폭(B=1.5m)보다 축소하여 설치함으로 인해 6,630천원의 공사비 절감이 가능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수는

- ① 제방 뚝마루에 반영된 실개천에 대하여는 발담그기, 휴식 등 당초 설치 목적의 달성이 힘든 점 등을 감안할 때 조성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공사비 감액(821,181천원)하고 대체시설을 조성하도록 「권고」를 요구하며,(권고)
- ② 조립식간이흙막이공에 대하여 당초 설계내역 보다 축소설치로 발생한 공사비 6,630천원 상당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에 따라 감액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시 주변 여건, 효율성 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에 대해 업무연찬, 교육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시정)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요구

제 목 영농폐기물 잔재 쓰레기 위탁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함양군(@@과, ★★★★★과)
조 치 기 관 함양군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 함양군(★★★★★과)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후 나온 잔류 쓰레기를 매립장에 매립 하였으나, 최근 함양군의 쓰레기 매립장의 처리용량 한계로 영농폐기물 잔재 쓰레기를 2017년 12월에 처음으로 민간에 위탁처리하였다.

2. 부적격 업체 민간 위탁(계약) 실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각종 계약 체결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 되어 있다
- 함양군(@@과)에서는 계약 체결시 입찰참가 가격 요건인 ㉠폐기물관리법 제 25조에 의한 수집·운반 능력을 보유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소각시설 보유)로서 소각시설의 일일처리능력이 30톤 이상인 업체 ㉡스스로 수집·운반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이때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 전문)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소각시설 보유)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 그런데도 함양군(@@과)에서는 2017년 12월에 ●●● 업체와 계약 체결시 소각시설 신고필증이 없는데도 폐기물 종합재활용 업체인 ●●●(◇◇ 소재)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민간 위탁업체의 쓰레기 처리 관리 부실

-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함양군(★★★★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등록된 ‘카고 트럭 현대 9.5톤 저상카고(2017-△△, △△도 △△△△)’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2017년 12월 15일, 16일 양일간 당초 허가시 등록된 차량 1대와 미등록된 차량 1대 등 2대 차량이 폐기물을 처리하였는데도, 무면허 수집운반업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수거된 폐기물에 대한 계량시 카고 차량이 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 수동으로 조작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계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수거된 잔류 쓰레기를 소각 처리하지 않고 처리하였으나, 폐기물 ▲▲톤 중 ▲▲톤 만 용역업체인 ●●●(◇◇ 소재)에서 ★★★★★(▼▼ 소재) 으로 위법(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4호 위반)하여 인계되었으며, 나머지 ▲▲톤은 수거된 쓰레기 처리 결과 등을 확인 되지 않는 등 쓰레기 처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1. 귀 기관에서 @@과, ★★★★★과에 대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조치와 함께 소속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시기 바라며,(주의)
2. 함양군 @@과 지방세무주사보 ㉠㉠㉠은 2017. 7. 1.부터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잔재 쓰레기 위탁 처리 계약’ 실무담당자로서, ★★★★★과 지방행정주사 ㉠㉠㉠은 2017. 7. 1.부터 현재까지, ★★★★★과 사무운영주사보 ㉠㉠㉠은 2017. 7. 1.부터 현재까지 ‘영농폐기물 잔재 쓰레기 위탁 처리’ 실무책임자와 실무담당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각각 『훈계』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훈계)